

역사에는 시효만료는 있을 수 없으며, 진실을 말하지 않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80년 광주의 민간인 학살은 일제의 잔재와 친일파를 척결해 내지 못하고 한국전쟁기 전후의 민간인 학살을 방치하거나 모른 채 해 온, 민족내부의 모순이 확대·재생산되어 온 결과에 다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전쟁기의 학살은 일제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수립되고 좌우, 남북의 대립이 절정에 이른 한국전쟁 중에 발생한 점이 특징이고, 특히 국내의 법적인 장치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내란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법적인 단죄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쟁 시기 발생한 유엔군, 미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국제인권법의 기초 위에서 해결하는 방법, 미국의 국가책임을 묻는 방법, 그리고 국내법의 체계 아래에서 해결을 모색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한국전쟁 중 구성된 국제연합군(UN)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국제연합의 군사활동에 있어서도 전시인도법규가 적용되는 것은 분명하며 또한 평화유지군의 위법행위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협정이 체결된 선례가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콩고 내전 중에 파견된 평화유지군의 행위에 대한 책임 문제를 다룬 협약은 그러한 예의 하나이다.

그러나 국제인권법의 규정으로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 혹은 국가 내 정치세력이 다른 세력을 학살한 사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한 사례는 제2차 대전 후 독일과 일본에서의 전범재판을 제외하고는 극히 드문 일이었으며, 국제규범은 오늘날과 같은 배타적인 국가주권의 원칙이 적용되는 한 대단히 무기력한 장치였다. 한편 미국의 국가 책임 문제도 과거 베트남전 당시의 미라이 학살 사건 처리, 최근의 노근리 사건 처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개별 사건을 '고립된' 돌발 사건으로서는 다루어도 국가적 책임의 차원으로는 절대로 발전시키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결국 UN, 혹은 국제인권기구를 통한 해결, 미국 측에 책임을 묻는 작업을 계속해야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은 역시 국내법으로 우선 해결하는 것이다. 현재 생존해 있는 피해자의 거의 전원이 국내에 있고, 가해자도 어떤 개인 군인이 아니라 국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원칙을 만드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그리고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의 진상이 완전히 드러나고, 관련 국가가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한국 내에

서의 구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등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요구함에 있어서도 당사국인 한국 자체의 책임 인정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책임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과거청산은 과거 권위중의 독재정권의 인적·물적 청산을 동시에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과거 수구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저항 및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갈등없는 사회는 없다. 과거청산 과정에서의 갈등은 우리 사회가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우리 현대사는 과거사에 대한 관대함으로 인해 너무도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고,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경험해야 했다. 잘못된 기정사실에 대한 묵인·방조 및 체념이 혼란의 역사를 부채질 한 것이다. 우리 사회가 한 걸음씩 전진과 발전을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과거청산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독재정권에 대한 인적·물적인 과거청산은 한편으로 해방후 이루지 못한 일제잔재청산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 참고 문헌

- 강정구, 1992. “한국전쟁과 미국의 세균전” 동국대학교사회조사연구소, 『동국사회연구』, 창간호
- 강정구, 1995. “베트남의 분단과 미국: 한국분단과 연관지어” 동남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 제4집,
- 강정구, 1996.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역사비평사, 1996
- 강정구, 1997. “베트남전쟁과 한국전쟁의 비교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4호
- 강정구, 1999. “노근리의 해원을 넘어 베트남 학살의 참회로!” 『황해문화』 봄호
- 이영희, 『베트남전쟁』, (두레, 1985)
- 眞保潤一郎(조성을 옮김), 『베트남현대사』 (서울: 미래사), 1986.
- 황허이(黃鶴逸)(백은영 옮김), 『도쿄대재판: 도쿄 전범재판의 전말을 통해 일본 보수 우익의 원류를 밝힌다』 예담, 1999.
- 고양금정굴양민학살사건 진상규명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1999. 『고양금정굴양민학살사건 진상보고서』
- 국제민주법률가협회, 1989. “미국의 범죄에 대한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조사단의 보고서”. 김주환역음,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전쟁』, 청사
- 권영진, 1990. “6·25살상 다시 본다” 『역사비평』 1990년 봄호
- 김귀옥, 1999, 『월남인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민으로부터의 월남민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낙중·김남기, 1985. 『굽이치는 임진강: 민족통일의 갈망을 안고 임진강을 건너간 한 젊은이의 열정과 고난』 삼민사,
- 김동춘, 2000. 『전쟁과 사회』, 돌베개
- 김득중, 1999. “이승만정부의 여순사건 인식과 민중의 피해” 여수지역사회연구소 편, 『여순사건 자료집』 여순사건 연구총서 2집
- 김삼웅, 1996. 『해방 후 양민학살사』 가람기획7
- 김성철, 1993. 『역사 앞에서』 창작과 비평
- 김영범, 1999. “집단학살과 집합기억: 그 역사화를 위하여” <제주4.3연구소 설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1999.11.21) 발표문>
- 김영훈, 2000. “제주 4.3의 현재적 과제와 전망” 광주항쟁20주년기념 제4회 동아시아

- 아 평화·인권국제회의, 『부활 광주, 한반도의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로』 발제문자료집. 2000년 5월 18일-20일 구례 한국통신수련관
- 김종민, 1998. “제주 4.3항쟁: 대규모 민중학살의 진상” 『역사비평』 42호
- 김주환역음, 1989.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전쟁』, 청사
- 김진계 구술·김웅교기록 보고문학, 1990. 『조국: 어느 ‘북조선 인민’의 수기(상)』, 현장문학사
- 김창후, 1993. “1948년 4.3항쟁 봉기와 학살의 전모”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제간 20호, 1993년 봄,
- 대전형무소 산내학살진상규명위원회, 2000. “대전형무소 산내 학살사건 진상 중간보고서” 2000년 7월 8일
- 서중석, 1999. 『조봉암과 1950년대-하: 피해대중과 학살의 정치학』 역사비평사
- 『시사저널』, 1995. “문경 양민학살 사건 은폐된 진실 밝혀냈다”, 『시사저널』 1995. 3.23.
- 안종철, 1998. 『여순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 여수지역사회연구소 편 『여순사건 실태조사 보고서 제1집: 여수지역 편』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편, 1998. 『여순사건 실태조사 보고서 제1집: 여수지역 편』 여순사건 연구조서 1책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편, 1999. 『여순사건 자료집』 여순사건 연구총서 2집
- 오연호, 1994. “6.25참전 미군의 충북 영동 양민 3백여명 학살 사건” 『말』 1994년 7월호
- 유지열 편역, 1986. 『베트남 민족해방 운동사』. 이성과 현실사
- 이영희, 1985. 『베트남전쟁』, 두레
- 이정록·김송미·이상석, 1997. 『20세기 지구촌의 분쟁과 갈등』 푸른길
- 이태섭, 1989. “6·25와 이승만의 민주통제체제의 실상”, 『역사비평』, 1989년 여름호
- 장미승, 1990. “북한의 남한 점령정책”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전쟁의 이해』 역사비평사
- 정은용, 1994.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 다리
- 정진상, 1994. “한국전쟁과 계급구조의 변동” 한국산업사회연구회 창립10주년기념논문집, 『계급과 한국사회』
- 정희상, 1990.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 없소: 6.25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발굴르브』 서울: 돌베개



- 제민일보 4·3취재반, 1994. 『4·3은 말한다 2』. 전예원  
 채의진 편저, 1995. 『아 痛恨 四十六年: 문경양민학살 백서 5판』 문경양민학살피학  
 살자유족회  
 최병수·정구도, 1999. “6·25전란 초기 충북 영동지구의 민간인 학살사건에 관한  
 연구(1): 노근리의 미군 대 양민 집단살상사건을 중심으로” - 주한미군범  
 죄근절운동본부 엮음, 1999. 『주한미군 범죄백서: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  
 사 미군범죄』 개마서원  
 한국일보 편, 1991. 『증언 김일성을 말한다: 유성철·이상조가 밝힌 북한정권의 실  
 정』, 한국일보사  
 황허이(黃鶴逸)(백은영 옮김), 1999. 『도쿄대 재판: 도쿄 전범재판의 전말을 통해 일본  
 보수우익의 원류를 밝힌다』 예담.  
 커밍스·할리데이(Bruce Cumings and Jon Halliday), 1990. 『한국전쟁의 전개과정』,  
 태암  
 전갑길, 2001.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학살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보고서』 제225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전갑길 의원실  
 이철호, 2002. “한국의 과거청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그 이후” <여수지역사회연구  
 소, 제6회 동아시아평화인권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2002.10.17) 발표문>  
 김동춘, 2002. “민간인학살 통합특별법 제정운동의 경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6  
 회 동아시아평화인권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2002.10.17) 발표문>  
 안병욱, 2004. “현대 한국의 과거청산”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과거청  
 산을 위한 학술심포지움(2004.9.3) 발표문>  
 김동춘, 2004. “한국 과거청산의 기본방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해외민주인사  
 초청 특별토론회(2004.10.15) 발표문>  
 Ball, Howard, 1999. *Prosecuting War Crimes and Genocide: The Twentieth  
 Century Experience*, Kansas: Univ. of Kansas  
 Chomsky, Noam. “The Lessons of the Vietnam War: An Interview with Noam  
 Chomsky” in George Katsiaficas (ed.), *Vietnam Documents: American and  
 Vietnam View of the War*. NY: M.E. Sharpe, 1992. Originally in  
*Indochina Newsletter*, no. 18. Cambridge Massachusettes, Nov-Dec, 1982  
 Cumings, Bruce. 1981 & 1990.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1 & v.2*,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Cumings, Bruce (ed.). 1983. *Child of Conflict: Th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1943-1953.*,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Endicott, Stephen. 1979. “Germ Warfare and ‘Plausible Denial: The Korean War,  
 1952-53” in *Modern China* v.5, no.1, January 1979  
 Feeny, Paul and Jim Allaway, 1992. “The Ecological Impact of the Air War”  
 George Katsiaficas (ed.), *Vietnam Documents: American and Vietnam View of  
 the War*. NY: M.E. Sharpe. Originally from *Air War in Indochina* edited  
 by Rapael Littauer and Norman Upholt, 1972 Beacon Press.  
 Felton, Monica. 1953. *That's Why I Went*, Lawrence & Wishart  
 Gutman, Roy and David Rieff ed., 1999. *Crimes of War: What the Public Should  
 Know*, NY: Norion & Company  
 Herring, George. *America's Longest War, 2nd ed.*, (NY: Alfred Knopf, 1986).  
 Hersh, Seymour. 1972, *Cover-Up*, Random House  
 Jonassohn, Kurt and Frank Chalk, 2000. “A Typology of Genocide and Some  
 Implications for the Human Rights Agenda” in Walliman, Isador and Michael  
 Dobkowski ed., *Genocide and the Modern Age: Etiology and Case Studies of  
 Mass Death* NY: Syracuse Univ. Press  
 Katsiaficas, George (ed.), 1992 *Vietnam Documents: American and Vietnam  
 View of the War*. NY: M.E. Sharpe.  
 Knoll, Erwin & Judith Nies McFadden ed., 1970. *War Crimes and the American  
 Conscience*,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Mandani, M. 1976. *Politics and Class Formation in Uganda*. NY: Monthly  
 Review Press  
 Marhan Hess. *Then, the Americans Came: Voices from Vietnam*, (NY: Four  
 Walls Eight Windows, 1993)  
 Markusen, 2000. “Genocide and Total War: A Preliminary Comparison” in  
 Walliman, Isador and Michael Dobkowski ed., *Genocide and the Modern Age:  
 Etiology and Case Studies of Mass Death* NY: Syracuse Univ. Press  
 McCormack, Gavan. 1983. *Cold War & Hot War: An Australian Perspective on  
 the Korean War*, Sydney: Hale & Iremonger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ssion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 Facts Concerning Bacterial Warfare in Korea and China, 1952. *Report of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ssion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Facts Concerning Bacterial Warfare in Korea and China*, Peking
- Merrill, John. 1989. *Korea: The Peninsular Origins of the War*, Newark: Univ. of Delaware Press
- Merrill, John. 1983. "Internal Warfare in Korea, 1948-1950: The Local Setting of the Korean War" in Bruce Cumings (ed.), *Child of Conflict: Th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1943-1953*.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Thayer, Thomas C. 1985, *War Without Front: The American Experience in Vietnam*, Boulder and London: Westview Press
- The Vietnam Veterans Against the War, 1972. *The Winter Soldier Investigation: An Inquiry into American War Crimes(이하 조사서)*, Boston: Beacon Press.
- Walliman, Isador and Michael Dobkowski ed., 2000. *Genocide and the Modern Age: Etiology and Case Studies of Mass Death* NY: Syracuse Univ. Press
- Winnington, Alan & Wilfred Burchett. 1954. *Plain Perfidy*, London: The British-China Friendship Association,
- Zenner, Walter P. 2000, "Middleman Minorities and Genocide" in Walliman, Isador and Michael Dobkowski ed., *Genocide and the Modern Age: Etiology and Case Studies of Mass Death* NY: Syracuse Univ. Press

## 「민간인학살 문제」 토론문

강 성 현

### 1.

발표자는 이 글에서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학살의 시대적 배경과 학살(사건)의 성격, 학살 규모의 실태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과거청산의 과제와 국가책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기존의 관련 연구들과 비교할 때 특기할만한 새로운 사실은 없지만, 과거사청산의 문제가 전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글은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은 대체로 평이한 서술이지만 동시에 표면적·피상적인 서술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하면 발표자의 일관된 관점을 계속해서 환기시키는 분석이 표면에 맴돌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따라서 토론은 발표자의 분석을 심화시키기 위해 생각해볼 문제들을 제시하면서 토론자의 쟁점을 아울러 제시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다.

### 2.

우선 이 글을 읽으면서 가장 궁금하고 고민했던 것은 전쟁 이전과 이후에 발생한 민간인학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발표자는 세계 각 지역의 다양한 학살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당시 한국의 학살을 '정치적 학살 (political massacre)'로 파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명명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개념은 단순한 문자적 의미에 대한 정보를 넘어서 원인, 과정, 결과 등의 다양한 정보를 통한 성격 규정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치적 학살의 내용은 무엇인가? 정치적 학살은 통상 어떤 권력집단이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압·제거하는 정치폭력을 포함한 일체의 학살을 의미한다. 한국전쟁 전후의 학살은 발표자도 언급했듯이 표면적으로는 단정반대세력, 더 나아가 이승만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에 대한 학살이었다. 최소한 이승만정권의 인식에는 '회색지대'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이는 여운형, 김구, 국회 내 무소속구락부에 대한 제거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 일체에 대한 학살을 의미했다. 그러나 한국전쟁 전후의 학살은 이것이 전부라 아니었다.

'4·3', '여순', 그 밖의 전쟁 전후의 작전으로서의 학살에 이르는 과정에서 필수적



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적의 창출(making enemy)'이었다. 그리고 이는 '비인간화' 작업을 동반했으며, 대체로 '빨갱이와 그의 種子, 가족 전체'가 '귀축', '악마' 등의 부정적 존재로 이미지화되는 과정이었다. 여기에는 이념적 언어뿐만 아니라 (유사)인종적<sup>1)</sup>, 종교적<sup>2)</sup>, 지역적, 문화적, 성적(sexual)의 차이를 드러내는 언어 등이 구사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사(rhetoric)가 정치적 반대세력뿐만 아니라 이와 무관한 사람들과 공동체에게까지 덧 씌어진다는 것이다. 일터, '땅'과 '바다'에 기대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치적·이념적 지향이 거의 희미하거나 전혀 없더라도 이러한 수사에 포박되었을 때, 이들은 꿈쩍없이 제거되어야 하는 세력으로 재현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승만정권의 '左翼視' 인식과 이해<sup>3)</sup>, 그리고 학살명령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정치사회적 과정이 총체적으로 얽히면서 가능해졌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이해가 지역의 일선 학살명령자에게까지 이어지면, 해당 지역의 학살의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 않고 독자적인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학살의 규모는 작아지거나 없던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전쟁 전후의 학살은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학살을 넘어서 복잡한 측면이 내포되어 있다. 학살에 이르는 정치사회적 과정이 이와 같이 복잡한데, 이를 정치적 학살이라고만 명명할 수 있을까? 초도화작전의 형식으로 국가가 조직적으로 작전 학살한 대상은 과연 정치적 반대세력에 국한한 것이었을까? 그리고 국가폭력의 조직적 개입에 따른 학살보다는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분명 존재했던 '사적인 감정'에 의한 보복학살은 정치적 학살에 포함될 수 있을까? 토론자는 한국전쟁 전후의 학살을 '정치적 학살'로 명명하는 것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겠다. 다만 성격 규명 이전의 조사와 연구 방향에 대한 원칙적 기준을 밝히고자 한다. 즉 1) 어떤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2) 어떤 집단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3) 어떤 집단을 표적으로 삼아 학살했는가를 4) 지역별, 시기별(국면별) 분석하고 이후 학살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가 몇 개의 특정 개념으로 명명될 수 있을지, 그래서 한국전쟁 전후의 학살 이론을 일반화할 수 있

1) 우리의 경우는 인종주의가 생물학적 '인종(race)'의 차이의 문제라기보다는 '인종화(racialization)'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생물학적 인종 차이가 없는 곳에서 특정 집단을 '비인간화'하기 위해 '인종화'의 정치사회적 과정이 발생한 것인데, 특히 적대적 '種子'로 재현되었다.

2) 마찬가지로 종교 신앙의 차이의 문제라기보다는 종교적 언어를 통해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여순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파견된 문인조사반과 종교대표단의 인식과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수사, 그리고 여러 신화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3) 따라서 이는 '좌익 사상의 보지'의 문제가 아니다.

을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심화된 조사와 연구를 통한 내용의 확보이다.

그리고 조사와 연구에서 앞서 언급한 4가지 기준이 충실하게 적용되었을 때 2)의 집단인 소위 '가해자'와 3)의 집단인 소위 '피해자'의 목록도 지역별/시기별 조금씩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학살이 분명 국가폭력의 양상을 띠는 학살이었지만, 그렇다고 '가해자 국가폭력 대 피해자 민중'의 구도로 단순 환원되어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가해자 목록에 주로 등장하는 집단을 무조건 고정된 가해자의 전형으로 이해해서도 안 될 것이다. 예컨대 민보단은 경남지역에서는 가해자 목록에 자주 등장하지만, 총알받이로 동원된 제주에서는 피해자에 가깝다. 그리고 '국군'을 무조건 가해자로 보는 것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싶다. 좌익 숙군 전후의 '국군'에는 다양한 동기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입대한 상태였다. 개인적인 입신 동기로 입대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제주와 여수, 순천에서 '빨갱이 사냥' 광풍을 피해 자발 입대한 사람도 있고, 강제로 징병된 사람도 있으며, 학살의 예감을 피해 전쟁 발발 전후 입대한 보도연맹원도 있다. 이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 반공전사가 되어 학살 가해자가 되기도 했지만, 총알받이로 그 운명을 마감한 사람들도 꽤 있다. 특히 총알받이로 생을 마감해야 했던, 또 다른 '죽음으로의 동원' 양상이었던 많은 사람들을 국군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로 보아야 할까? 토론자의 생각에 이들은 분명 피해자이다. 전선 주변 지역, 보도연맹, 형무소수감자 등등과 마찬가지로 (비록 외형상 자발성의 형태를 띠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강제적으로) 죽음으로 동원된 사람들이었다.

### 3.

다음으로 과거청산 과제로서 민간인학살에 대한 국가의 책임문제와 관련해 묻고 싶다. 발표자는 할 수만 있다면 민간인학살을 최대한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정부의 관행을 비판하면서, 과거청산이 역사의 전환기에 있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실의 사회적 회복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국가 도덕성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토론자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문제는 민간인학살을 국가의 과오이자 책임으로 인정하게 하고, 사과 및 기타 후속조치들을 통한 '원상회복'을 국가에 강제할 방법이다. 발표자는 인적 청산과 제도적 청산을 논의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는 보상이 아닌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소위 '과거청산 5원칙'이 발표자의 의중에 깔린 듯



보인다. 그러나 이는 지난 우리의 소중한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원칙의 천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책임 하에 과거청산의 과제가 실시되고 이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특별법(과 시행령) 제정과 위원회의 설립을 촉구하는 입법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하고, 우리의 사례에 적절한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시민사회운동의 역량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sup>4)</sup> 그리고 더 나아가 '진상규명'과 '화해'의 양립 가능성, 즉 두 마리 토끼 쫓기의 딜레마를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가 문제의 관건이 될 것이다. 발표자가 잠깐 언급하고 있는 남아공의 진실과화해위원회(성공)사례는 '철저한 진상조사, 국가적·사회적 명예회복, 국민대통합'이라는 원칙의 천명만으로 결코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불처벌과 사면이라는 타협을 통한 화해와 통합에 정면 대결해 얻은 결과였다. 위원회는 인간극(human drama) 형태의 증언청취 과정과 청문회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면시켜 철저하게 사실을 고백·사과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사면을 인정받은 것이었다. 물론 가해자들이 조직이나 단체로 응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자격으로 응해 사면신청을 위해 형식적인 반성과 사과를 했다는 의구심이 여기저기서 제기되었고, 형식적인 공정성의 논리에 밀려 해방운동의 대항폭력을 국가폭력과 똑같은 차원에서 다루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지만, 남미의 사례와 비교할 때 비교적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어쨌든 남아공의 사례는 진상규명과 화해의 양립 가능성의 어려움을 토로해준다.

#### 4.

마지막으로 과거청산 과제와 관련한 우리의 과제를 언급하고 싶다. 발표자는 과거청산의 문제가 단순한 한풀이 역사로만 노정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토론자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거창사건'은 거창지역의 한이고, '4·3사건'은 제주도의 한이며, '노근리사건'은 노근리만의 한이라는 식의 특정 집단의 문제로 협소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회피의식의 산물이다. 이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책임'과 관련한 문제이다. 사실 여기저기서 "잊는 편이 나은 기억을 괜히 들쭉서 사람들에게 왜 혼란을 주는가?"는 요지의 말들을 듣는다. 과거청산과 관련해 현재 국민의 50% 이상이 찬성하고 있지만, 이는 역으로 반대 역시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반대의 대다수는 "이렇게 나라

4) 의문사진상규명운동의 교훈을 절실하게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의 분열을 초래하는 좋지 못한 기억들은 묻어두고 가는 편이 낫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가히 '책임'이 실종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독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의 논의를 소개하고 끝맺고자 한다. 그는 나치체제하 독일이 저지른 여러 충격적인 잔혹행위들을 목격하고 난 후에 독일인들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논의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독일인은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도덕적 책임, 정치적 책임, 형이상학적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서 정치적 책임이란 국민 모두가 온갖 종류의 학살과 만행을 저지하지 못한 집단적인 책임을 말하는 것이며, 형이상학적인 책임은 누군가 고통스럽게 죽어갔는데 운 좋게 살아남은 데에 따른 집단적인 죄책감으로서의 책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그의 논의는 망각과 건망증의 터널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끝>



# 과거청산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 5차 토론회>

## 한국민주화운동

-이념적 특성 · 역사적 형성 · 현재적 과제-

발표 : 송 병 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토론 : 정 지 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때 : 2004년 11월 25일 늦은 7시  
곳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주최 :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주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한국민주화운동-이념적 특성 · 역사적 형성 · 현재적 과제

송병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1. 문제의 제기

현재 노무현정권 하 한국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주요 특징은 보수와 극우만을 대표하는 정치적 대표체제, 빈부격차의 심화, 지방균형발전의 결여, 주류언론의 담론지배 등이다. 노동진영이나 사회적 소수자의 이해가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고, 개혁이 지체되거나 개혁의 일관성을 국민이 느낄 수 없을 때, 정권의 지지계층이 실망하고 지지를 철회하게 된다. 이러한 지지철회의 상황은 다시금 정책추진력의 약화를 가져와, 이는 결국 민주화의 지체 내지는 위기로 이어진다<sup>1)</sup>.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노무현정부에 지지도는 출범 초에 비해 14%나 하락했다.<sup>2)</sup>

반독재민주화가 '성공'하고 15년이 지난 지금 그 '성공'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회불평등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며, 비정규직이 50%를 넘고 다수의 대중이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 국가보안법으로 아직도 탄압이 지속되고 과거청산이 삐걱거리고 노동운동 등 민중운동이 여전히 탄압받고 있는 상황, 민중생존권이 위협받고 반공주의적 담론이 여전히 지배하며 사회적 소수자의 이해가 대변되지 못하는 체제를 과연 민주화된 체제라 부를 수 있을까? 한국의 민주화는 불철저한 개혁의 과정을 보여줘 왔다. '문민의 정부' 때 IMF처방을 수용했으며, '국민의 정부' 때 '민주주의와 시장의 병행발전', 그리고 이후 '생산적 복지'의 슬로건을 내걸었고 노사정위원회도 가동되었으나, 국민 생활의 질은 전체적으로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해야 옳다. 즉 국민의 정부 시절 사회보장예산의 GDP 대비 비율도 꾸준히 상승한 것이 사실이고,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1999), 의료보험 통합과 건강보험 발족(2000.7) 등 적극적인 제도개혁이 이루어

1) 최장집,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 이후, 2002.

2) 『한겨레신문』, 2003.5.26, 1면.



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김대중정부 하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빈곤이 엄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지표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sup>3)</sup>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악화되었다면 도대체 '민주화'는 무엇을 위한 민주화란 말인가. 현재 노무현정부의 경우도 비정규직의 확대 등 반노동자적인 정책방향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 많은 대중이 민주화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화의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현재의 민주화 상황의 문제의 기저에는 한국 민주주의의 전망의 한계가 놓여있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개념확대이다. 즉 민주화는 민주주의의 심화로, 실질적 민주화로, 즉 많은 대중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보다 권리를 향유하는 형평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민주화운동의 이념적 지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한국민주화운동의 역사는 어떠한 것이었던가? 한국민주화의 현재를 도래케 한 배경으로서 한국민주화운동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민주화운동의 역사 속에서 한국민주화운동의 이념적 특성을 규정하고 민주화운동의 현재적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반공주의적 지배담론의 기원 - 민중적 민주주의의 억압과 '냉전적 자유민주주의'의 부상

한국민주화운동의 이념적 지향의 출발은 자유민주주의였다. 왜냐하면 한국의 권위주의-독재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했으나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마저 철저히 억압하고 탄압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군정 이래 자유민주주의가 이식되면서, 자유민주주의 이외의, 사회적-경제적 민주화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관념 즉 민중민주주의적 민주주의 개념은 철저히 억압받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미군정 이래 한국의 지배적 민주주의 담론은 자유민주주의였다.

더욱이 그것은 반공주의적 한계에 묶인 자유민주주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지배적 민주주의 담론은 '반공자유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성격이 이렇게 규정된 배경은 체제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의 도

3) 이영환, "김대중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경제와 사회』 55(2002 가을); 『한겨레신문』 2003.2.16일, "빈곤층 8.9%→12%로 6년새 크게 늘어" 등 여러 기사.

입과 자유민주주의가 지배적 위치로 부상하게 된 과정이 냉전적 상황과 남북한 체제대결의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지배적 체제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는 미군정의 냉전적 사고에 의해, 그리고 이승만을 거쳐 박정희에 이르는 반공주의적 이념에 의해 강하게 각인되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해방 직후 한반도의 이념적 지향은 보다 급진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한반도 전체를 놓고 볼 때 해방 직후 정치상황은 '좌파 해게모니'적인 상황이었다. 한반도는 소련군정의 후견과 결합된 북한내 좌파주도적 상황과,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 조선인민공화국(인공)의 등장이 의미하듯, 중도 세력부터 좌파를 아우르는 정치세력의 조직화와 대중적 호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좌파가 내거는 개혁정책들이 친일청산, 농지개혁 등 당시 시대적 과제로서 아래로부터 분출되던 민중들의 요구와 친화적이었기 때문이다.<sup>4)</sup> 1945년 8월은 한국전역에서 철저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혁에 대한 광범위한 요구가 분출되는 시기로 특징지워진다.<sup>5)</sup> 남한의 어떤 다른 지도자들보다도 인공의 지도자들은 조직, 동원, 민족적 목표의 제시라는 주권의 기반을 다지는 데 있어서 훨씬 앞섰다는 점은 분명하다<sup>6)</sup> 중요한 것은, 해방직후 해방된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상황에서, 당시의 사회경제적 제반 모순의 해결을 위하여 요구되었던 민주주의 개념, 그리고 광범위한 민중의 '지지'를 받았던 이념은 보다 민중적이고 사회개혁적인 민주주의 가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초기적 민주주의 개념은 고전적 민주주의 개념 즉 '인민의 지배'와 유사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45년 9월 14일 인공의 선언문을 보면 보다 급진적이고 민중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읽을 수 있다.

4) 정해구,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사회문화연구소 편, 『한국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2001. 김혜진, "반공블럭형성연구"-박정희체제의 국가동원 메카니즘에 관한 연구(2002 학술진흥재단 지원연구), 3쪽 참조.

5)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김주환역, 청사, 1986, 16쪽.

6) 브루스 커밍스, 위의 책, 165쪽.

7) 이 때 민중의 '지지'가 이념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 인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언표('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때 민중의 '지지'란 당시 '좌파적' 이념의 변혁적 내용과, 당시 민중의 주요 요구(친일파청산, 토지문제의 해결 등)와의 '친화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일체와 그 잔존세력, 반민주적 도당, 반동적 요소,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외세의 영향도 철저히 척결하고 완전한 자율성과 독립을 달성하여 진정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한다.”<sup>8)</sup>

이러한 보다 근본적인 민주주의 개념은 이승만 독재체제가 지속되던 1950년대에 도 근본적으로는 사라지지 않았다. 즉 1950년대는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시기였다.

“1950년대는 정치, 경제, 사회, 이념과 정신의 면에서 나름의 독특한 색깔을 갖고 있었는데 한편에서는 전쟁의 완전폐허가 놓은 우울과 음침함, 가공할 반공운동과 위로부터의 동원, 극도의 공중과 피해가 존재하였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급격한 사회적 이동과 평등주의의 확산, 대중사회의 도래, 보통선거가 창출하는 엄청난 정치동원과 참여의 폭발이 일어났고 민주주의를 둘러싼 성명전과 공방, 힘겨루기가 불을 뿜었다. 정치사회적 수준에서 1950년대 한국사회는 표면적으로는 강력한 반공체제가 안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기실 격심한 내부 변동과 교체, 이동, 유동성을 보여준 시기였다.”<sup>9)</sup>

그리고 이러한 보다 근본적인 민주주의 개념을 지향하는 조봉암의 진보당을 위시한 정치세력은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진보정치세력에 대한 대중의 지지 역시 강력한 것이었다. 1공화국(1948-1960) 하에서 진보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규합하여 보수정당에 대항하는 진보적 민족정당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sup>10)</sup> 이들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어떠한지는 1956년 정부통령선거에서 조봉암 후보가 전체 유효투표자수의 30%인 216만 표를 얻은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sup>11)</sup>

즉 당시 대중적 요구를 반영한 가치는 보다 민중적인 민주주의의 이상이었다고

8) 브루스 커밍스, 앞의 책, 161쪽에서 재인용. 강조 필자.

9) 박명림, “1950년대 한국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역사문제연구소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 1998, 76쪽.

10) 권희경, 『한국혁신정당과 사회주의인터내셔널』, 태양, 1989, 15-97쪽.

11) 전명혁, “한국진보정치운동의 역사와 의미”, 『기억과 전망』(2004 가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23쪽. 그러나 2공화국 내각제 하 민의원과 참의원 선거에서는 혁신정당들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 민의원 5명, 참의원 2명만 당선되는 결과를 빚으며 참패했다. 권희경, 앞의 책, 48쪽.

할 수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러한 민주주의 이상과 이를 향한 대중의 지지와 동원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열려 있었다.

그러나 해방 직후부터 이러한 민주주의 이념, 그리고 이를 지지한 세력과 이와 연관되었다고 의심받은 다수의 민중은 미군정에 의해 철저히 억압되고 탄압되었다. 반면 국제적 냉전의 도래와 함께 변혁과 혁명을 두려워 한 미군정과 기득권 세력에 의해 반공주의와 반공주의에 채색된 자유민주주의가 이식되고 강요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기 이후 단정 수립과 분단, 한국전쟁, 독재체제의 강화과정은 민주주의에 관한 두 개념이 서로 투쟁하다가 지배세력의 민주주의개념이 궁극적으로 전일화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지배세력의 민주주의 개념은 바로 반공주의적 자유민주주의였다.

이러한 초기의 민중적 민주주의 개념에 대조되는 새로운 민주주의개념이 미군정에 의해 이식되게 된다. 이 새로운 민주주의 개념은 이른 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였다. 물론 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가치는 구한말 시대에 일부 지식인들에 의해 논의된 바 있다.<sup>12)</sup> 그러나 본격적으로 하나의 체제이념으로 도입된 것은 미군정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것이었다. 즉 미국을 통해 한국에 이식된 ‘자유민주주의이념’은 이념과 사상의 국가적 통일을 전제로 한 ‘냉전자유주의’, 형식적·절차적 수준으로의 민주주의 개념의 축소, 보통선거제와 의회제를 민주주의 자체와 동일시하는 선거주의, 민주주의개념의 비정치화 등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sup>13)</sup> 즉 그것은 냉전의 전개에 따라 왜곡되고 축소된 ‘냉전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에 이식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서는 반공을 전제로 한 기본적 이념과 가치의 합의가 강조되고, ‘사상·이념·언론·집회의 자유’ 등은 반공의 틀 내로 축소되었다.<sup>14)</sup>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노동문제, 사회문제, ‘사회주의적’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상과 언론, 집회의 자유는 철저히 탄압받는 것을 의미한 것이었다. 또한 이 ‘자유민주주의’는 선거, 다수

12) 이나미,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연원과 전개”, 송병현, 이나미, 김면희, 『한국자유민주주의의 전개와 성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근간) 참조.

13) 박찬표,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미군정기 자유민주주의의 초기제도화』,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 315-316쪽.

14) 박찬표, 같은 책, 316쪽.



결 등 형식적, 절차적 측면만을 중시할 뿐 '누가 지배하는가'와 같은 사회구조의 본질적 문제는 외면하는 이념이었으며, 민주주의를 '계급간 갈등과 경쟁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민중의 이해가 표현되는'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생활과 삶의 방식'으로 이해함으로써 민주주의 개념의 탈정치화와 왜곡을 의도한 것이었다.<sup>15)</sup>

더욱이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반공주의였다. 즉 미군정에 의해 이식되었고, 미소대결의 냉전체제 속에서 더욱 강화된 '자유민주주의이념'은 미국식 자본주의의 이상화, 사적 소유권의 신성불가침화, 일체의 노동운동 탄압의 정당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반공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것이었다. 반면 사회주의권의 모든 성과는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적'인 것으로 규정되었으며<sup>16)</sup> 이러한 반공논리는 국내의 일체의 '체제변혁적' 시도와 운동에 적용되어 탄압의 명분을 구성했다. 이상의 의미에서 한국에 이식된 자유민주주의는 최소주의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담지한 것이었다.

이렇게 반공주의적으로 왜곡되고 축소된 '자유민주주의'는 이후 집권세력에 의해 끊임없이 유린되고 형해화되었다. 즉 1960년대 박정희 독재체제에 이르러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주의와 등치되고,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주의적 요소에 대한 탄압마저 반공주의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 곧 미군정에 의해 체제이념으로 이식되고 이승만 정권과 한국전쟁에 의해 보다 강화된 반공규율사회는 1960년대 이후 새로운 변화를 겪는다. 박정희정권은 반공규율사회의 기반 위에서 산업화와 병영화를 통해 사회를 반공병영사회화 하면서 성장주의를 핵심적인 이데올로기로 만든다. 새롭게 강화된 반공규율사회, 즉 반공병영사회는 적나라한 감시와 폭력, 이데올로기적 통제에 산업화를 통한 물질적 기반의 확보라는 조건이 결합된 사회를 의미했다.<sup>17)</sup> 이러한 상황

15) 박찬표, 같은 책, 312-315쪽.

16) 박찬표, 같은 책, 310-311쪽.

17) 김정훈,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사회민주주의", 한국사회민주주의연구회 편, 『한국 사회민주주의선언』, 사회와 연대, 2001, 298쪽. '반공규율사회'(anti-communist regimented society) 개념은 조희연, 『한국의 국가, 민주주의, 정치변동』, 당대, 1999.

조희연은 anti-communist regimented society를 반공규율사회 혹은 반공병영사회로 사용하는데, 위의 글에서 김정훈은, 시기를 구분하여 이승만시기를 반공규율사회, 박정희시기를 반공병영사회, 그리고 87년 이후를 반공병영사회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필자는 김정훈의 시기구분 및 명칭부여에 공감한다. 김정훈, 앞의 글, 298쪽, 각주 1) 참조.

속에서 이른 바 '반공규율사회'가 체계화되면서 진보정치세력은 정치의 주요세력에서 밀려나면서 억압되고 주변화되는 상황을 지속하게 되었다. 나아가 이제 민주주의의 지배적 개념은 해방정국에서의 민중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냉전적-반공주의적 자유민주주의'로 대체되게 되었다.

### 3. 한국민주화운동의 이념적 특성 - 반공자유민주주의의 극복을 향한 길

일제 시대 좌파탄압의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반공주의가 등장한 이래 미군정과 50년대를 거치면서 반공주의는 가장 강력한 지배이데올로기로 기능했으며, 분단의 고착화와 박정희 독재체제를 거치며 이후 시기에 이르기까지 '반공-개발역사불력'의 역사적 연속성을 이어주는 핵심요소였다.<sup>18)</sup> 사회의 병영화가 해체된다고 해서 반공규율사회 자체가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반공병영사회기에 접합된 반공주의와 성장주의는 그것의 물적 토대인 압축성장의 성과에 의해 1987년 이후에는 반공성장주의로 사회를 규율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1987년 이후의 시기는 시민사회의 병영화를 통한 시민사회의 통제가 어느 정도 해체되면서 보다 세련된 방식의 이데올로기적, 물질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반공규율사회, 즉 반공성장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기존의 반공이데올로기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지만 폭력과 감시보다는 성장주의, 소비주의를 통해 통제가 유지된다.<sup>19)</sup>

이렇게 지배적 이념이 된 한국의 '반공자유민주주의'는 1970년대까지 민주화운동세력에게도 영향을 미쳐, 반공주의와 반미주의는 저항세력이 건드릴 수 없는 금기의 영역이었다. 따라서 1960년대-1970년대 민주화운동의 '주요' 목표는 대체로 자유의 회복, 반독재였고, 민중의 생존권, 불평등의 철폐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영역으로 나가지 못하였으며, 반공주의의 한계에 갇혀 있었다. 즉 1960년대-70년대 반공주의의 제약과 탄압으로 인하여, 그리고 1970년대의 경우는 유신헌도가 모

18) 김혜진, 앞의 글, 2쪽 참조.

19) 김정훈, 앞의 글, 298쪽.

물론 1990년대에 들어와 점차 반공규율사회가 약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혹은 개정의 움직임, 과거청산의 노력, 사상의 자유의 상당한 수준의 용인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반공규율사회의 강고성을 보여주는 사례들도 많다. 노동운동에 대한 지속적 탄압, 이적 표현물 규정의 자의적 적용사례의 지속, 국보법 폐지가 아닌 개정여론의 우세 등은 아직 지배적 '패러다임'으로서의 반공주의의 강고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든 것에 우선하는 당면한 최대 과제였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에서 주장하는 바는 다양한 편이 아니었고, 1980년대와 같은 이념적 계급적 지향은 약하였다.<sup>20)</sup> 즉 당시 민주화운동의 '주된' 지향은 자유민주주의의 회복, '민주적 기본질서의 회복'<sup>21)</sup>,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 학원 및 종교의 자유를 쟁취'<sup>22)</sup>하는 것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의 틀 내에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1969년 3선거헌 반대를 위한 한 선언에는 '민주'와 '평화적 정권인수'와 함께 '승공통일'이라는 표현도 볼 수 있다. 1970년대 민주화운동의 대표적인 인사들에게서도 반공인식은 투철해 보인다. 1977년 11월 11일 발표된 "현하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최근 수년간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으로 투옥되어 있는 양심수는, 그들에 대한 적용 법규의 여하를 막론하고 전원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반공인사가 도리어 국가의 보안을 해친 것으로 처리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sup>23)</sup>

즉 당시 특히 1970대 중반 시기까지 억압적 독재체제에서 민주화운동이 주요하게 요구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복원과 회복이었지, 그 이상은 아니었으며 여전히 반공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민주화운동이 반공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자유민주주의의 최소주의적 민주주의를 넘는 실질적 민주화를 요구하고 이를 위한 변혁전략을 모색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광주 비극을 통한 '각성'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미 생존권 수호를 위한 민중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민주주의 개념의 확대를 향한 시도와 노력도 보여졌다. 당시 노동자 농민 빈민층의 희생을 대가로 한 종속적 착취경제하에서 1970년 전태일 분신을 계기로 하여 광주대단지사건 등의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노동자 농민 빈민의 분노가 연쇄적이고도 대규모로 폭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찍이 민청학련은 '민중민족민주선언'에서 '기아임금으로 흑사당하는 근로

20) 서중석, "유신체제와 민주화운동", \_\_\_\_\_.

21) 1970년 4월 8일 '민주수호국민협의회' 결성 선언문.

22) 1971년 4월 21일 '민주수호청년협의회' 결성 결의문.

23) 김귀옥, "한국 민주화운동과 반공주의: 반공주의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민주화운동의 쟁점과 전망」(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술단체협의회 공동주최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03년 9월 30일), 85쪽에서 재인용.

대중과 봉건적 착취 아래 신음하는 농민 그리고 또 하나의 격리된 세계에서 확대되어 가는 판자촌 -- 이것이 13년에 걸친 조국근대화의 업적인가?'라고 하면서 '민족자립경제의 확립, 민중의 생활권 보장, 올바른 경제분배질서의 확립과 빈부격차의 해소' 등을 주장하며 민주화운동의 민중지향성을 천명하였다<sup>24)</sup>. 이 선언에서 민중이 맨 앞에 나와 있는 것도 의미심장하거나 말미에는 '우리는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민족 집단을 분쇄'하기 위해 꺾기했음을 천명하였다.<sup>25)</sup> 즉 1975년경을 지나면서 정치적 민주화운동은 생존권에 관심을 두는 사회적 민중적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키게 되며, 대외종속에 대한 인식도 엇볼 수 있다<sup>26)</sup>. 즉 1970년대 말에 이르러 민주화운동 진영에는 민중, 민족 담론들이 등장하고 이러한 담론은 내용상으로는 계급적 시각과 민족적 시각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시각은 반공주의의 극복문제와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민중적 주체를 통한 변혁 전망과 결합되지 못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어 1980년대에 한국민주화운동은 기존의 자유민주주의적 한계를 넘어서서 보다 변혁적 성격을 띠게 된다. 즉 한국민주화운동은 1980년대 이후 이념적으로 일방적 착취와 불평등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모순을 직시하게 되고, 독재정권을 지지하는 미국에 기대어 폭력통치를 자행하는 파시즘적 국가에 맞서 민중민주주의적 이념을 추구하는 많은 변혁적 운동집단의 출현을 보게 되며, 노학연대에 기초한 대중운동적 성격이 증가하게 되며, 조직적으로도 계단체가 결합한 연대조직의 형성(국민운동본부 등)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민주화운동의 지향과 대중성, 조직상에 큰 변화를 보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80년 광주의 비극이었다.

"80년 5월 광주는 5공 독재의 역사적 정통성과 지배의 도덕성을 박탈하고 운동정치

의 혁명화·급진화를 촉진하는 도덕적이고 정서적인 기초를 끊임없이 제공했다."<sup>27)</sup>

24) 이종범, "광주민중항쟁의 배경에 관한 연구", \_\_\_\_\_.

25) 서중석, 앞의 글.

26) "한일협정은 이 나라의 경제를 일본경제에 완전히 예속시켜 모든 산업과 노동력을 일본 경제침략의 희생물로 만들어 버렸다." 1976년 3월 1일 '민주구국선언'.

27) 이수인, "1980년대 연합체 조직의 운동정치", 「한국전쟁 이후 87년 민주화까지 비제도적 운동정치에 관한 연구」(2002년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회 포럼), 83쪽.



당시의 고뇌와 열망을 담은 문건의 하나인 '부활의 노래'는 '5월 광주'의 의의와 교훈을 이렇게 적고 있다.<sup>28)</sup>

“열사들의 죽음을 뛰어넘는 투쟁으로, 피흘림으로 이루어진 광주 5월 민중항쟁은 민족의 등불이며 민중의 이정표이고 역사의 교과서로서 살아남은 사람과 후세에게 찬란한 교훈을 주었다. 5월광주의 거리, 반민족, 반역사의 무리들에 정면으로 대항해 싸우는 민중들의 아름다운 모습, 공포와 죽음을 뛰어넘은 핏빛거리, 단결하고 연대하고 살을 부비고 밥을 나누고 피를 나누는 위대한 삶의 공동체, 생명의 존귀함을 지키고자 죽음을 마다않고 일어선 거룩한 시민들, 남녀노소 계급계층을 뛰어넘는 인간공동체의 참모습...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될 민족공동체의 참모습,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주의의 실체를 보았다. 미,일 등 외세의 본질을 뼈저리게 느꼈고, 거기에 기생하여 권력을 유지해가려는 민족의 이단세력들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도도히 흘러온 민족사의 진리를 읽을 수 있었다.”

80년의 참담한 '좌절' 속에서 민중운동세력은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어야 했으며, 이에 따라 운동의 주체와 동력, 인식적 기초, 대상과 방법에 대한 반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80년대를 거치며 한국민주화운동은 노학연대를 출발로 한 광범위한 연대투쟁의 경험을 축적해갔으며, 민통련, 국민운동본부 등의 통합적 조직체를 건설하였으며, 85년 구로동맹파업, 86년 5.3인천투쟁을 거쳐 87년 6월항쟁에 이르는 대중운동적 가능성을 경험해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80년대를 거치며 한국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 개념의 심화와 확대를 지향하게 되었다. 즉 민주화운동은 기존의 지배담론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부터 민중민주주의적 이념으로의 변화를 지향했던 것이다. 물론 1980년대에도 기존의 자유민주주의적 이념을 지향한 반독재저항세력과 다수의 대중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어쨌든 1980년대에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다른, 보다 민중민주주의적인 민주주의 이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과거에 비해 보다 큰 영향을 갖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한국의 민주화는 향후 민주화운동

28) 전남사회문제연구소편, 『윤상원평전』, 풀빛, 1991, 325쪽. 조현연, 「한국 정치변동의 동학과 민중운동: 1980년에서 1987년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63-64쪽에서 재인용. 강조 필자.

의 진로에 따라서는 민중민주주의적 변혁적 길을 향한 조건과 가능성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었다.

#### 4. 1987년 6월항쟁과 한국의 보수적 민주화

그러나 1987년 6월항쟁의 '성공'으로 인한 한국의 민주화는 결국 민중민주주의적 변혁의 길로 나가지 않았다. 양김의 분열로 인한 단일화의 실패, 이 실패로 인한 '유사민주주의'적 노태우정권의 수립, 지역주의의 강화로 인한 지역주의적 정치담론의 부상, 진보정치세력의 의회진출의 실패, 3당합당으로 인한 '타협적 민주화'의 전개, DJ의 집권과 노무현정권의 등장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민주화는 결국 기존 자유민주주의적 이념을 벗어나지 않는 '보수적 민주화'의 진로를 밟아왔다. 이것이 '보수적 민주화'인 이유는 한국 민주화의 현실적 진로가 기존의 자본주의체제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보수'(즉 수호)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반면 불평등의 악화, 기득권층의 강화, 노동자세력의 파편화 등을 결과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 민주화가 이렇게 보수적 경로를 밟게 된 것은 사회주의의 몰락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전일화라는 외적 변수도 있었다. 결국 이상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87년 이후 한국민주화의 과정은 기존의 '반공역사블록'을 이른 바 '민주화운동블록'<sup>29)</sup>으로 대체시키지 못했다. 즉 지배담론으로서 반공주의와 시장근본주의와 반노동자주의와 보수주의가 여전히 지속되고 그 위세를 떨치고 있다.

이러한 '(반독재)민주화 이후의 보수적 민주화' 과정에서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앞에서 한국민주화운동의 과제가 실질적 민주화, 민주주의의 심화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87년 이후 91년 5월을 기점으로 한국민주화운동은 더 이상 민주화의 심화를 위한 대중운동의 성격을 띠지 못하였고, 과거와 같은 운동의 구심점으로서의 폭발력을 갖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87년의 '반독재-직선제개헌'과 같은 공통이슈의 부재, 공통의 '적'이 사라진 이후 다수 중간계급의 이탈, 민주화운동진영의 분화와 '분열' 즉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으로의 분화와 괴리의 증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담론과 시장지상주의의 영향과 이로 인한 이념적 지향의 보수화 및 변혁전망의 상실 등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의 복합

29) 정해구, 앞의 글, 10쪽.



적 영향으로 한국민주화운동은 실질적 민주화, 즉 반독재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과제가 더욱 절실히 제기되어 온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운동의 중심이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오늘날의 한국민주화현실과 민주화운동의 현재적 상황이다.

#### 5. 민주화운동의 현재적 과제 - 과거청산, 민주화운동, 기억과 기념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민주화운동의 현재적 과제는 무엇인가?

① 첫째로, 우리는 앞에서 민주화운동의 목표가 민주주의의 개념을 실질적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심화시키는 것이 되어야만 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를 위하여 관건이 되는 것은 반공주의의 극복이다.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의 노력이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과 민간인학살의 주체에 관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은, 반공주의의 극복이 과거청산과 민주화의 진전에 얼마나 관건적 과제인지를 보여준다. 더욱이 보수언론의 영향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환경 속에서 반공주의적 보수주의의 영향력은 쉽게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실로 한국민주화운동에서 지배담론으로서 반공주의의 영향과 이로 인해 거의 '상수'처럼 존재하는 반공주의적 대중의 존재는 민주화운동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다.

이 반공주의적 성역은 대중의 의식에 내면화되어 오늘까지 완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민주화의 진전,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서는 이 반공주의의 극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왜냐하면 반공주의는 한국자유민주주의를 일체의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금기시하는 식으로 축소시키고 형해화시켰기 때문이다. 즉 반공주의적 지배담론이 강고한 상황에서, 일체의 반정부저항은 반체제운동으로 따라서 '빨갱이'로 규정하여 탄압했으며, 민주주의를 노동과 사회로 확산하려는 일체의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등의 민중운동을 불온시하고 탄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자본가-노동자간 극단적 힘의 불균형과 사적 소유의 신성화, 그리고 저항적 조직노동자의 무력화와 배제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기본질서'를 지키면서, 의회 정당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뽑는 절차적 이념으로 축소되었으며,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로의 권리확대를 철저히 배제하는 최소주의적 개념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공자유민주주의라는 지배적 이념은 대중 뿐 아니라 민주화운동세력의 지향이념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민주화운동은 역사바로세우기의 문제인 동시에 국가폭력에 희생된 보편적 인권의 문제인 과거청산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상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공공성이라는 보다 자유주의적이고 보편적인 담론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활용할 필요함으로써 반공주의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② 둘째로, 민주화운동의 범위와 대상에 관련한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의문사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의한 법률'(이하 명예회복법)에 의하면, 민주화운동은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내용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협의의 민주화운동(그 상징으로 국가보안법)을 넘어서는 광의의 민주화운동(예컨대 국가보안법 위반의 민주화운동 등)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될수 없는 것인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규정에 있어서 반공주의적 족쇄를 극복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을 강조함으로써 국민적 합의의 기반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③ 셋째로, 비제도적 영역 내 시민운동과 민중운동간의 연대의 증진은 민주화운동의 진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최근 시민운동의 '탈정치화'와 '보수화'가 거론되고 있으며, 반면 민중진영의 비타협성이 지적된 바도 있다. 중요한 것은 연대의 강화라는 목표이다. 이 목표를 위해서라면 작은 차이는 관용하는 정신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부문운동간의 연대투쟁의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운동의 지점들과 논리를 발견하고 제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과거청산' 이슈의 현재성을 명확히 부각시켜 시민단체와 국민들을 설득한다든지 하는 예가 그것이다.

④ 넷째로, 향후 민주화의 진전과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서 진보정당의 의회진



출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민주화운동진영에서 연대하여 단일한 후보를 지지한다든지, 진보정치의 중요성을 홍보한다든지 연대와 참여를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

⑤ 다섯째로, **과거청산의 현재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홍보함으로써**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증대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과거로부터 지속된 사회기득권 구조의 문제, 반공주의에 의해 정당화되고 지속되어 온 국가권력의 폭력성, 일제하 강제동원 등 문제와 현재의 일본 등 군국주의의 문제와의 연관성 등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과거청산과 민주화운동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부각시켜야** 할 것이라 본다. 즉 과거청산은 과거의 왜곡된 역사바로세우기, 민간인의 희생과 명예회복, 국가폭력의 문제 등 보다 보편적이고 역사적인 문제의식과 연결되어 대중적 호소력을 지닐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과거청산은 반공주의의 영향을 약화시키고 인권의 중요성과 국가폭력의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과거청산은 민주화운동의 성장과 민주화의 진전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⑥ 여섯째로, 민주화운동의 제도화된 성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기념사업회, 보상심의위 등이 **관료화에 빠지지 않고 운동성을 유지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요구를 제도 속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주화운동진영은 이들 제도화된 성과에 참여하고 공동의 연대활동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비제도영역의 민주화운동진영 뿐만 아니라, 이들 제도화된 기구내의 인원들에 의해서도 기울여져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⑦ 일곱째로, 민주화운동진영은 이른 바 **‘당사자주의’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하고 극복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즉 ‘당사자주의’는 민주화운동이 과거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희생된 이들의 성과로서 그 결실과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그 당사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기억과 기념이 민주화운동정신계승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고 기념관건립도 중요하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이 과거 많은 열사와 참여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이루어져왔다는 것도 망각되어선 안된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의 현재적 과제에 대한 인식과 미래적 전망과 단절된 채 과거의 것을 회고하고 복원하는 데 치중하는 경향, 그리고 기념관을 민주화운동 당사자들의 물적 기반으로 간주하는 경향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향이 현실

화된다면 이는 매우 우려할만한 것이라 본다. 이렇게 되면 기억과 기념의 문제는 흘러간 과거를 추억하고 회상하는 의미를 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결국 **현재의 ‘실질적 민주화’의 문제와 씨름하는 다수 민중의 고통과 희망을 반영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억과 기념은 민주화 진전의 동력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를 복고적 유물로 만듦으로써 민주화의 진전을 가로막는 결과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 과거청산을 위한 연속 토론회

<종합토론회>

## 왜 지금 과거청산인가

- 과거청산의 방향과 지평의 확장 -

사회 : 안 병 옥 (가톨릭대 국사학과 교수)

토론 : 김 민 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서 우 영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윤 해 동 (서울대 강사)

한 흥 구 (성공회대 교수)

홍 세 화 (한겨레신문 기획위원)

때 : 2004년 11월 27일 늦은 2시

곳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주최 :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주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왜 지금 과거청산인가

- 과거청산의 방향과 지평의 확장 -

### 과거청산 토론회의 배경과 경과

**안병욱:**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그 동안에 과거청산문제를 가지고 '목요 릴레이 토론회'를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해왔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여섯 번째인 마지막 종합토론회로 그 동안의 발제와 토론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과거청산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좀더 진전된 논의와 인식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토론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우리가 그 동안의 논의들을 공유하고 그 내용들을 깊이 있게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토론회는 이런 논의에 참여하지 못한 수많은 일반 독자들에게, 예컨대 과거 청산이 무엇인가라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논의로부터, 현재 다루어지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점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경과를 말씀드릴 때, 제1회 토론회에서 김동춘 선생은 「과거청산의 방향과 원칙 -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 역사해석과 도덕적 판단의 문제」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고, 윤해동 선생이 토론자로 참석해주셨습니다. 제2회에서는 친일과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참석해주신 김민철 선생이 「친일과 문제 - 역사책임의 문제」로 발표를 해주셨고, 송경아 선생이 토론자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제3회에서는 「인권침해-공권력의 폭력성과 위법문제, 의문사, 노동자, 농민의 인권침해-와 운동과정」을 주제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계신 박경석 선생이 발표를 하였고, 이창수 선생과 허영춘 선생이 토론자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제4회는 「민간인 학살문제」로 이영일 선생이 발표를 해주셨고, 강성현 선생이 토론자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제5회는 「민주화 운동 - 운동의 성과와 확산」이라는 주제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송병헌 선생이 발표를 해주셨고, 정지운 선생이 토론자로 참여하셨습니다.<sup>1)</sup> 오늘은 여섯 번째 토론회로 종합토론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우영 선생이 그동

1) 이상 토론회의 발표문들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http://www.kdemocracy.or.kr>)



안 진행되었던 토론회의 주요 쟁점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영:** 저는 이 토론회가 만들어진 배경을 우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난 8·15 광복절 노무현 대통령 경축사 이후에 '포괄적 과거청산'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후 과거청산과 관련되어 발의된 약 13개 법안의 추진주체들이 회동을 갖고, 포괄적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 기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켰습니다. 9월 3일 과거청산법 관련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과거청산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후 11월 9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를 공식 발족하였습니다.

올바른 과거청산 운동의 당면한 과제는 과거청산에 관련된 입법투쟁과, 과거청산을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한 대규모 홍보·교육·의식의 공유문제로 압축됩니다. 이러한 과정, 즉 이 토론회가 법안투쟁의 긴박한 필요성속에서 기획되었다는 것이 토론회 전체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목요일 토론회는 처음부터 다섯 번째까지 어떤 구조나 특정한 주제의 논쟁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거청산의 문제를 범주별로 소개하는 식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과거청산 운동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부재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일단 범주별로 소개하는 차원으로 이 토론회가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각 토론회의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각 토론회의 내용은 특별한 논쟁이 촉발되었기 보다는 이러한 범주별로 이러저러한 사안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었으며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탐색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날 과거청산의 기본 방향에 대한 김동춘 선생의 발표는 과거청산운동의 성격과 개념, 내용과 범위 그리고 주체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가장 강조됐던 것은 과거청산 운동은 선先 진상규명 후後 배·보상, 사회적 처벌로의 합의 그리고 교육의 문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동춘 선생은 과거청산의 주체로서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역시 가해자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김동춘 선생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과거청산이 가해자의 측면에서만 혹은 피해자의 측면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는 민관합동기구의 형태가 주체로서 제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가 다섯 번째 토론회까지 이

의 연구자료실 참조. [www.kci.go.kr](http://www.kci.go.kr)

어졌습니다. 토론회에서 윤해동 선생은 지금 과거청산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들이 과거청산운동에 대해 상당히 몰가치적인 혹은 절대적인 가치부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의 요지는 첫째, 운동의 주체들이 '과거청산만 하면 한국사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식의 분위기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청산 운동의 주체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협소함을 지적하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했습니다. 둘째, 한국사회의 성격에 대한 보다 차분하고도 냉철한 접근을 통해서, 과거청산 운동의 실제적인 경로와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 한국제노사이드학회 창립대회가 있었고,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영일 소장과 이이화 선생 등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셨는데 그분들의 중심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과거청산운동의 가장 중요한 전기가 지금 아닌가, 지금 입법투쟁만큼 중요한 논의가 더 있겠는가', '윤해동 선생의 지적은 약간 한가한 지적이 아닌가, 오히려 본질적으로 어떻게 입법을 쟁취하고 그를 위한 집중된 논의를 이끌어 내는 방법에 대한 토론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토론회의 사회를 맡았었는데, 당시의 논쟁 내용들이 상당히 보완적인 내용들이면서도 감정적인 대립들을 유도할 수도 있었지만, 저의 경우에는 그 내용에서 본질적인 대립점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제기는 이후의 토론회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즉, 한편에서는 '지금 과거청산 운동을 이걸 해야 한다 혹은 포괄적으로 저걸 해야 한다' 식의 주장이 한가한 주장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비판과 '현재 우리가 너무 입법투쟁에 매몰된 것이 아닌가, 과거청산 운동의 폭을 협소화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시각 혹은 인식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의 토론회에서 발생한 논쟁의 진원이었습니다.

현재 발제자가 안 나와 계신 분들은 의문사위원회와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발표 해주신 두 분입니다. 의문사위의 성과와 한계를 다뤘던 내용들은 크게 보고의 성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문사위의 출범은 유가족들이 주축이 된 1년 반의 천막농성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최초의 공식적인 국가기구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했으나 제도를 장악하기에는 소수였죠. 그리고 이문제가 인권문제 전반으로 확대되는데 있어서의 한계, 즉 법안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조사 대상에서의 한계, 시한에서의 한계, 특히 권한에서의 한계 등-가 보고되었습니다. 특별한 논쟁은 없었지만 이날 제기된 문제는 의문사위의 조사방법이 기존의 수사방식과 유사한 틀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이러한 성격이 과거청산운동의 전체상을 조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민간인 학살문제 토론에서는 이영일 소장이 전체적으로 한국의 학살은 정치적 학살의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된 요지는 한국전쟁 전후의 학살은 전 세계적인 냉전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극우정권이 수립되는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대만, 그리스, 베트남에서 발생했던 것과 가장 유사하고, 스페인, 베트남, 그리스 등지에서 적과 아군이 불투명한 내전 상황에서 군의 정치폭력과정 중에 학살이 발생했다는 점이 한국전쟁과 공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념적으로 정치적 학살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학살의 주체에 의한 분류, 시기(한국전쟁 전, 초기, 그리고 이후)에 따른 형태적 분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였던 부분은 학살의 문제를 단순히 '몇 만이 죽었는가'라는 양적인 문제로 계량화하고 수치화하는 경향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역시 민간인 학살문제의 처리주체는 국가이며, 민간인 학살문제의 해결은 남한사회 인권문제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강성현 선생의 간략한 문제제기는 정치적 학살로 규정하기에는 한국에서의 민간인 학살의 성격이 복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역사적·정치적·사회적 맥락에서 어떤 집단이, 어떤 의도로, 어떤 집단을 표적으로 학살을 했는지 지역별·시기별·국면별로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다섯 번의 토론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과거청산의 의의와 개념

**안병욱:**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토론회의 쟁점들을 지금 재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충분히 논의 되지 못했던 문제들은 오늘 토론을 통해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원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처럼 과거청산의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어왔던 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 것입니다. 2002년도에 유네스코가 발행하는 《코리아저널》에서 특집 기획을 통해 한국의 과거청산에 관한 논문을 몇 편 실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청산에 해당하는 영어표현을 찾지 못했습니다. 영어 단어에는 우리의 과거청산에 부합하는 말이 없습니다. 사항별로는 그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 '실종자 처리 문제'와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영어 단어는 있

었지만,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과거청산'에 해당하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영어로 된 외국문헌에 '과거에 대한 취급', '과거를 묻기', 그리고 '과거를 극복하기'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으나 '과거청산'처럼 한마디로 명쾌하게 정리되는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학 관련자들에게 문의하기도 했습니다만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학자와 함께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과거청산이라고 말할 때 '과거는 무엇이고', '청산은 무엇이나'라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청산'이라는 말은 청소와 같이 무언가 부정적인 것을 쓸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과거청산의 맥락에서 '청산'이라는 말이 실제 사용된 의미를 따져본다면 처벌과 보상, 명예 회복과 기억, 역사의 정확한 기술 그리고 진상과 사실을 밝혀내는 것의 당위성 등 이러한 여러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의미는 서우영 국장이 말하는 것처럼, '민족 반역자 문제', '친일 문제', '부일 문제' '좌익·우익의 민간인 학살', 독재정권이 자행한 '의문사'를 비롯한 인권침해 사건들과 '불법 비리' 등과 같은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서 생각하면 너무 복잡해서 영어단어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내용을 함께 담을 수 있는 말인 '과거를 정리한다'는 의미로, 저는 'settle the past'라는 신조어를 사용했습니다. 꼭 적절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만 아쉬운 대로 그렇게라도 표현해야 우리의 과거청산 문제에 다가가는 근사치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과거청산 문제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역동적인 부분이고, 또 세계 학계에서 과거청산에 관해서는 우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우리의 지난 현대사에서 전개되었던 민주화 운동, 민중 운동 그리고 과거 청산과 관련한 활동들은 세계사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나라들이 참고할만한 좋은 경험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점이지요. 예를 들어 중남미와 동남아시아에서 각기 과거청산이 제기된다면 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배워갈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과거청산 토론에서 주요 논점이라는 것을 미리 밝혀두고자 합니다. 우선,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청산 문제가 왜 복잡한지'를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홍세화:** 왜 우리에게 과거청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가는 역사적 맥락에서 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일제시대의 부역이라는 식민지 상황, 이것을 벗어나자마자 분



단 상황과 동시에 냉전의 가장 첨예한 지점에 한반도가 위치한다는 것, 그리고 한국전쟁이 촉발되면서 그 이후 미국에 종속적인 냉전 상황과 함께 군사독재가 이어져온 것 때문에 과거청산이 복잡하게 얽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복잡한 상황으로 몰고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분명 복잡한 부분들이 있지만, '가해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일관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즉, 민족적 정통성이 없는 일제 부역 세력이 분단 상황과 함께 미국을 등에 업었으며 이 사회에서 계속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되었지요. 이로 인해서 가해자는 하나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피해자의 성격은 다양하게 나뉘지는 이런 특수한 모습이 복잡성의 한 모습이 아닐까요? 달리 말하면, 친일 문제, 민간인 학살 문제, 그리고 국가 폭력의 문제가 피해자의 측면에서 보면 각기 나뉘어 질 수 있지만, 가해자의 측면에서는 일맥상통합니다.

기왕 제가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과거청산 운동의 도덕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거꾸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반민특위가 49년도에 실패하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즉 55년 만에야 겨우 가해자 집단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었죠. 지금 논의가 시작되고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겨우 현실 정치의 역학관계의 변화에서 온 것일 뿐, 언론·교육·종교·법조 등 여타 부분은 여전히 구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구도 속에 있습니다. 아직은 정치적 힘이 약한데다가 과거 청산의 의지마저도 미미합니다. 따라서 과거 청산의 당위성은 분명하나, 그 당위성에 비하여 아직 힘이 약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자칫 도덕화라고 비판하는 위험성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더 큰 정치적 힘이 있다면 과연 우리가 도덕화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한홍구:** 한국의 과거청산과 관련해서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청산되지 못한 과거의 만물상이다, 백화점이다, 종합선물 세트다.' 과거청산 문제가 논의되고 궤도에 오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처지를 비유해보겠습니다. 60년 동안 굶다가 좋은 뷔페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뷔페에서 모두 다 먹을 수 없고, 너무 굶은 상태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성은 안차고 탈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홍선생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가해자의 맥락에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괄적 청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선생님의 지적처럼 우리의 과거청산 문제가 복잡한 것은, 다른 나라의 경우 10-20년 내에 과거 청산의 문제를 해결해왔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60년간을 끌고 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들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는 과거청산 문제가 제기될 때 학살이나 의문사 등 한 두 가지 유형의 사건들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 제기되는 갖가지 사례들을 모두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안별로 입장도 다르고 조사방식도 달라야 하고, 유족이 살아있는지의 여부 등 여러 복잡한 문제들에 따라 과거청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국가가 나서서 이런 개별 사건 하나하나를 몇 년 안에 국가 책임 안에서 낱알이 밝혀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앞섭니다.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동시에 과거 청산과 관련해서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처럼 문제의 많고 복잡함도 존재하지만 중요한 것은 힘의 관계, 권력의 관계입니다.

분명 과거청산에 대해서도 때가 있습니다. 종기 짊 때를 생각해 보면, 잘 익은 시기에는 별 힘을 들이지 않고 상처도 없이 고름이 나오지만 그 시기가 너무 이르면 아프고 흉터가 남습니다. 과거에는 프랑스 혁명이나 독일이나 동독이나 러시아처럼 구체제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과거청산이 단두대를 가지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신속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아공처럼 백인정권이 단기적으로 정권 유지에 문제가 없었지만(3-5년 정권 유지에 문제가 없었지만), 10년을 내다볼 때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자신들도 죽을 것이고 자신들의 자식들도 남아공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아공은 과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세력이 아직 힘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화해를 청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도 과거청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구세력은 과거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려 하지 않습니다. 친일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이 잘못이나, 너희도 그때를 살아봐라'라고 말하고,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그 당시 빨갱이들을 죽이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전향공작에 대해서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라고 한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라고 뻔뻔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청산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분명히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세력이 아직도 힘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해체시키는 수단으로서 과거청산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들이 한국의 과거청산을 시끄러운 일로 만든다고 봅니다. 6월항쟁 이후 간헐적으로 민간인 학살문제가 제기되었고, 2000년 들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식의 언급들이 나오면서 과거청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현재 과거청산 문제를



들러싸고 대립이 심화된 이유는 97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행정부의 권력이 구세력으로부터 민주화운동 세력으로 넘어왔고, 2002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구세력이 정권탈환을 노렸으나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초조해진 구세력은 권력 재탈환을 위해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던 의회권력을 동원해서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그 역풍으로 구세력이 2/3 이상을 장악했던 의회권력마저 과거청산을 바라는 민주화운동세력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청산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민주화운동 세력이 행정권과 입법권 두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입법과정에서 과거청산문제가 제기되었지만 과거청산의 대상은 이에 결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구세력이 장악한 국가권력이 사법부이다 보니, 최근 행정수도 이전, 국가보안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등의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강력한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 과거청산의 '도덕화'?

**윤해동:**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저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새로운 정치권력이 들어서면서 과거청산 문제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요. 이처럼 과거청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저간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홍구 선생께서는 과거청산 문제를 정치투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과거청산 문제는 정치투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을 '개혁'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정치권력'만'을 장악한 상황이고 여타의 권력, 특히 사법부나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청산이 도덕화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더라도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두 분 말씀에 공통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에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김영삼 정권 때부터 과거청산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역사바로세우기'라는 개념을 내세워 전두환 정권의 쿠데타행위에 대한 처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정권인 김대중 정권 때 그들은 바로 정치적 사면을 받았는데요.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의 가장 중요한 과거청산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대통령 한사람의 결단에 의해서 사람들을 구속하고, 사법부에서는 이를 수용했던 것이지요. 결국 김영삼 정권시기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방식의 과거청산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일과성의 의례적인 행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공론의 장을 형성하지 못했고, 쿠데타 행위가 어떤 문제를 갖는지에 대해 토론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바로세우기'가 쿠데타 행위로부터 비롯된 인권유린과 의문사에 대한 조사로 직접 이어지기가 어려웠던 것이지요. 현 정권이 들어선 뒤, 국가 차원의 입법화 과정을 통해서 각종 위원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과거청산의 조사 대상을 한 번 살펴봅시다. 동학농민전쟁을 비롯해서 법안으로 제출된 것만 해도 20여 가지가 됩니다. 즉, 100여년에 걸친 과거청산의 각종 대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백여 년 전부터, 곧 한말부터 식민지를 거쳐 현재까지도 줄곧 같은 지배세력이 기득권세력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식의 발상입니다. 달리 말하면, 피해자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해는 동일한 지배세력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의 것을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식의 생각을 저는 비판하는 것입니다. 전 이것을 '첫 단추 잘못 끼우기'의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인식은 역사에 대한 단선론적 이해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과거 친일행위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인권 유린과 민간인 학살 행위가 이어졌다고 보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는 도덕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사회적 공론화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은 채 유일하게 힘을 갖고 있는 정치적인 장, 곧 정치권력을 이용해서 하루빨리 입법화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서 과거청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을 우려합니다. 다시금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역사이해의 단선론적 시각이 과거청산에 대한 도덕화를 유발하고, 여기에는 개혁에 대한 강박관념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신경 써야 할 점은 사회적 공론화가 아닐까 합니다. 저는 과거 청산의 방식이 하나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고 다양한 논의 속에서 이 방식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수자에 의해서, 정치권력을 등에 업고 입법화만 추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법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사회적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책임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도 과거청산의 한 가지 방식인 입법화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김민철: 윤해동 선생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동의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해동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에 사후적인 해석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배경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상적으로는 지금의 시점에서 입법화라는 것이 중요한 현안과제이지만, 이 과제가 제기되면서 한국사회에서 과거청산이 대단히 정치화되고 있고, 그 이면에는 다른 의미로서 도덕화문제가 제기된다는 지적은 동의합니다. 다만 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하고 대단히 정치화되면서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과거청산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화되면서 정치권력의 논쟁으로 변질될 수 있는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관적으로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첫째로,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신문의 극단적인 사실왜곡과 공격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론화의 부정적인 영향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의 조·중·동 신문과 문화일보의 사실 칼럼 전체를 조사한 결과 모든 내용이 공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네 개의 신문지면이 이렇게 공격하는 가운데 과거청산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은 거의 힘들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즉, 피해자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드러내고 해결할 것인가라는 시각은 사라지고, 단순히 지배권력의 문제로만 치환되는 듯 여론을 몰고 가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안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과거청산이라는 큰 틀로 논의되고 있지만 여기에는 복잡한 문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친일문제에는 역사의 책임문제와 역사 해석의 문제가 개입하고, 민간인 학살과 의문사문제에는 인권의 문제가 개입합니다. 민간인 학살문제에는 또한 체제와 이념의 문제도 개입하지요. 과거청산이 갖고 있는 복잡함을 '과거청산'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과거청산을 공론화시키는 데 어려웠던 것이지요.

다음으로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청산의 문제가 정치화되면서 열린우리당이나 또는 지금의 집권세력이 커다란 유혹을 받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은 어떻든지 과거청산의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한 장치로서 과거청산문제를 거론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은 깨끗하기 때문에 손해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유혹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청산의 문제를 다루면서, 헌정질서의 파괴 문제를 비롯한 과거에 발생했던 모든 사건들을 끄집어 내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게 정치적 논쟁으로 변질되고 체제 문제로 변질될 수 있

는 하나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마치 이것이 본질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과거청산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 과거청산 문제가 정치화되고 도덕화의 측면으로만 치중되면서, 과거청산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꼬이고, 부정적이고 기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만들려는 과정을 보면, 무엇보다 이것은 대통령의 의지, 대통령의 표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열린우리당은 과거청산 문제에 대해서 이전부터 내부의 공론이나 의지가 없었습니다. 다만 내년이 2005년이라는 시점이 있고 한국사회에서 갖는 이 시점의 사회심리적인 요인이 있었죠. 뭔가 과거의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사회심리적 요인이 작용을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지표현 이후에야 당을 통해 법을 만드는 구체적인 과정이 시작된 거죠. 한 마디로 정치권에서 준비가 덜 되었던 거죠. 다만 과거청산과 관련해서 현재 스무 개의 법안들이 중구난방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정치권력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대단히 불균등하게 어떤 사안들은 해결된 채, 어떤 사안들은 미해결된 채로 말이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국가차원에서 본다면 종합적으로 해결할 시점에 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분출하는 요구들을 정치권이든 사회가 수렴할 단계에 와있다는 생각들이 맞물린 것이죠. 복잡한 과거청산의 문제가 올해 터져 나온 것은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사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과거청산 문제를 반대하는 집단과 찬성하는 집단이 대립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과거청산을 반대하는 집단은 분명히 그 과거청산 문제에서 오는 불이익들을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막아 두려고 하는 것이며,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역사화하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간에 맡긴다든지 또는 학술화 함으로써 책임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입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인간의 본성상 당연한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과거청산 문제를 바라볼 때 이것을 주도하는 집단이 어떤 면에서 암묵적으로 자신은 절대적인 선이라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쪽 진영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당위적이고 지극히 풀어야 할 과제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도덕화나 정치권력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것 역시 제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홍구 : 60년이 된 과거청산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청산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특히 친일청산이 만병통치약은 더더욱 아닙니다. 친일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즉 친일 청산을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면 지금 북한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비록 북은 친일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하지만 북은 북대로 또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윤해동 선생의 말 가운데 '친일잔재 청산을 못한 것이 이후의 인권문제와 무관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인 경험 속에서 친일파들이 군사반란을 일으킨 것이고, 그들이 일제시대를 방불케 하는 체제를 만들어가면서 인권침해가 일어났고 의문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길 교수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초기에 이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바로 과거청산문제들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포괄적으로 청산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입법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과거청산 문제가 가장 탄력을 받은 것은 5공청문회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광주 청문회를 겪고 나서 길에 나갔을 때 사람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학살자, 살인마라고 말해도 듣지 않다가 사람들이 전두환, 노태우를 도둑놈이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더 많은 증거가 드러나면서 분노가 더했었는데, 이것은 감춰졌던 진상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당시의 수준에서 말이죠. 진실이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측면을 갖습니다.

입법화 문제가 중요한 것은 법 자체의 효력이 물론 중요하지만, 입법화 과정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 진상을 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같은 방송프로나 오마이뉴스와 한겨레신문 그리고 여기 나오신 여러 선생님들이 활동하고 계신 단체들이 주장하면서 진실이 많이 드러난 것 같지만, 수많은 과거 사건들의 진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은 아직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중·동 신문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입법화 과정 자체가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가 진상규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보면, 전직 대통령을 두 명씩이나 감옥을 보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과거청산이 안되었냐고 하면, 광주항쟁 문제만 보더라도 우리가 보상과 명예회복, 묘역 조성, 국가 유공자 선

정을 위해 무수한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주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진상규명의 핵심이 빠져있습니다. 발표명령 문제가 계속 남아있습니다. 과거청산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역시 진실,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진실규명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입법화가 필요한 것이지요. 지금 과거청산 법안들을 보십시오. 여러 잡다한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창법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법안은 진상규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배상이나 보상의 문제는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규명과 연동되는 입법화가 중요합니다.

김민철 선생의 말에 다 동의하고, 물론 생색내기식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에다 비유하면 높은 데서 아래로 청소하고 물걸레질을 해야 하는데, 지금 60년 묵은 대청소에서 정치권이 생색내려고 물걸레질부터 하며 카메라 앞에 나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의 상황에서 친일파조차도 친일청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때입니다. 우리가 친일정당이라고 말하는 한민당의 정강정책에도 친일잔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상황이 뒤집혔던 것이죠. 우리가 과연 저 사람들의 저 정도 각오를 갖고 갈 수 있는가를 문제제기하는 것은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안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 모든 과거청산을 생각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치화가 우리의 책임이고 오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과거청산에 관련해서 TV 토론회에서 나온 사람이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의 토론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 토론회에서도 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개혁에서 보수 진영에서 나온 사람 역시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면, 모든 전선에서 맞물려 있는 과거청산은 바로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비단 우리나라의 과거청산만이 도덕화 문제와 직면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근본적으로 과거청산에는 도덕적인 문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정치적인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얻어낼 것인가가 문제이지요.

홍세화: 윤해동 선생이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의 공감대에 대해서 말했지만,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제도화를 이룰 수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제도화



가 구성원의 의식변화를 추동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홍구 선생이 말씀하셨던 것에 몇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이전에 과거청산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단선적인 인식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일제 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세력이 60년 동안 누려왔던 기득권 수구세력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 사회의 다양한 모순을 심화시켰고, 그 모순이 우리에게 내면화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도전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도덕화'라는 비판을 하셨다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타나는 과거청산 운동의 현상을 모두 도덕화라고 말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과거청산은 필연적으로 사회정의 문제이고 권력문제인 동시에 당위성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도덕화라고 말씀하시지만, 도덕이라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 과거청산의 주체 역량

**안병욱 :** 이제 과거청산의 주체 역량과 관련하여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요? 서우영 선생이 먼저 말씀해주시지요.

**서우영 :** 역사학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바라볼 때 상당히 관찰자적인 시각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논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빠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한국에서 과거청산 운동의 주체 역량이 얼마나 성숙해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상당히 낙관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세화 선생님의 말씀과 윤해동 선생님의 말씀이 갖는 차이를 보면, 한쪽은 만들어가야 된다는 주체적인 입장에서의 관심이고, 다른 쪽은 냉철하게 분석할 때 이리이러한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한국시민사회 역량이 과거청산이라는 말로 제기된 역사운동의 개념을 인식하고 자신의 운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정희 기념관 반대운동을 했던 4년 전에 상당수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사안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기념관 반대운동을 진행했던 힘은 상당히 소수였고 그것도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적인 참여가 다수였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포괄적 과거청산에 관한 운동기구를 조직했습니다만, 과거청산 운동의 주요 역량의 핵심들은 지금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 유족들, 의문사위 1·2기의 실제 경험에 바탕한 조사관들이 중심이며, 한국사회운동을 이끌고 있는 주요한

역량들은 아직 함께하고 있지 못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문제, 생존권 문제에 대한 운동역량의 10분에 1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현실로 인정한다면 제 생각에는 사회적 공론화 문제는 홍세화 선생님의 지적처럼, 소수의 역량을 가지고 담론을 만들어내는 방법, 즉 입법투쟁을 통해서 해결해가야 한다고 봅니다. 입법투쟁에 목을 매고 있다고 지적을 받는 단체들은 오히려 정치적인 위험성을 느낍니다. 그들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공감대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이 내년 재보궐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제1당이 되지 못함으로써, 이 입법화의 기회도 날라 간다는 위기의식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과거청산을 이끌어가는 주체 역량의 성장 문제와, 어떻게 이 사회가 과거청산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의 현실입니다.

**윤해동 :** 시민사회의 역량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시민사회의 역량이 약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한 맺힌 발언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여지가 적은 것이지요. 지금까지 지구상의 어떠한 과거청산 논의도 피해자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피해자의 논의가 각국의 시민사회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되었던 것은 그것이 공감대를 얻었을 때였습니다. 과거청산에 대한 문제제기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과거청산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논의가 제대로 과거청산의 필요성을 환기할 수 있는 시각에서 출발한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아까 논의로 되돌아가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해석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홍구 선생님은 '친일파들이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다'고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일본군이나 만주군의 출신전력만을 가지고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한홍구 :** 전력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을 말한 것이지요.

**윤해동 :** 저는 그 사고방식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사회의 지배계층이 친일행위를 했었고, 단정수립 이후 우파세력으로 그대로 이어졌는가?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배계층이 것처럼 단순하게 수평적으로 이동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해방 후 한국사회가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세계시장으로 편입되면서, 일제 말기 협력의 경험을 가진 근대화론자들의 다수가 한국 자본주의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친일의 잣대만을 가지고서 그런 현상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배세력은 일관되게 이어져왔지만 피해자는 시기에 따라 달랐다고 보는 시각이 피해자의 입장을 도덕화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어떤 도덕적 흠집도 없다. 따라서 이 문제를 도덕적인 우월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생각입니다.

**한홍구:** 저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똑같이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고문사건에서 고문의 피해자는 우리가 과거청산에서 말할 때 고문당한 사실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평소의 그가 얼마나 도덕적이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에서 도덕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은, 가해자 쪽이 권력을 휘두르며 도덕과 정의마저 자신들이 가진 것처럼 행세해 왔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사실은 이렇게 나쁜 놈이었다'라고 말하려다보니까 도덕문제가 제기된 것이지요. 이것은 과거청산의 본질입니다. 모든 과거청산에는 도덕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이것은 흠이 아닙니다. 아쉬운 것은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도덕적인 부분을 하나의 전술로서 계속 사용해왔는데, 이것은 한계지만 과거청산의 치명적인 결함은 아닙니다.

**서우영:** 도덕화경향이 문제라면 어떤 문제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윤해동:** 지금 제가 제기했던 문제는 역사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 년 동안 한국의 지배층은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몽땅 청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시각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좀 더 정확하게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지배층이 일관되게 백 년 동안 이어져왔다는 발상이 문제제기의 도덕화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덕화의 문제는 명백히 과거청산 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하나의 차원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쟁 중 민간인 학살의 문제는 도덕화해서는 전혀 다를 수 없고, 독재 정권 시기의 인권유린이나 의문사는 정치적인 수준의 행위로부터 유발된 것이죠.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도덕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 과거청산과 친일문제

**홍세화:** 오늘날의 사회현상을 봐도 일관성을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바로 지금 과거청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세력이 결집되어 반대하고 있고 그 뿌리가 무엇인가를 봐도 우리가 그 일관성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들은 민족적 정통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철저히 의존했습니다. 이후에 계속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역으로, 사적 이익에 충실한 사람들이 윤리적 성격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집하고 지금까지 이어져오면서 과거청산이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만 봐도 그들의 뿌리가 무엇인가는 현상적으로 쉽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하면서 말을 잇고 싶습니다. 흔히 민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일제 부역세력을 정리하지 못한 탓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말하는 데, 저는 아예 '옷을 거꾸로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애당초 사적 이익을 위해서 민족을 배반한 일제 부역세력이 당연히 정리되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고, 바로 그들이 나라의 공적 부분을 온통 틀어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치·경제·교육·언론·법조·치안·국방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누가 과연 지배세력이 되었는가, 그 뿌리가 전부 일제 부역세력이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대학 교육에서 그 뿌리를 생각해봅시다. 바로 오늘 서울대 김민수 교수가 복직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뿌리는 지금까지 왜 이렇게도 질긴가? 그가 뭘 문제제기 했으며, 그것이 오늘 복직되지 못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리고 그 문제제기의 대상이 된 세력들이 윤리적·도덕적·민족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결집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져왔는가? 여기에 담겨있는 것은 결국 극우반동과 패권적 지역주의로 연결될 것입니다.

**안병욱:** 역사해석과 관련한 이 논의를 여기서 더 진행하기엔 좀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만 이것의 핵심은 친일파 문제일 것입니다. 이에 관한 김민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철:** 친일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도덕화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견이 지금 좁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청산 문제를 도덕화로 접근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해방 이후에 좌우



익의 대립에서 한국의 지배계층인 우파가 좌파에 대해서 빨갱이 사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배권력들이 혹은 그의 말단 하수인이 반체제 인사들을 고문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입니다. 분명히 당시의 사람들이 그런 사냥들을 하고, 사람들은 베트남전쟁에서 “김상사가 빨갱이 잡아서 허리에 해골을 차고 있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러나 도덕화라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지금 너는 틀렸어, 너는 나쁜 놈이야’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고문을 했던 사람들 또는 베트남에 참전했던 사람들, 좌우익 대립갈등에서 빨갱이를 사냥했던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고 믿으며 행했던 것이죠. 분명 우리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도덕화 문제는 ‘넌 틀렸어, 너 자수해’라는 생각이지요. 그런 식으로 과거의 문제를 바라보면, 실제 가해자들은 역사적·정치적·법률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역시 시대의 피해자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가해자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것을 도덕적으로 바라본다면 ‘너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사슬에 얽혀있는 과거의 문제를 단순히 도덕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지요.

이제 친일문제로 돌아가서, 역사 해석의 문제제기는 홍세화 선생이 말한 것처럼 역사의 뿌리가 한 뿌리라는 것과 관계있습니다. 사실 전 80년대 어린 시절 세상에 눈을 뜨고 운동을 하면서 최초로 배웠던 역사인식은 이런 것이었고, 그것이 운동을 하게 한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간 근현대사를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역사를 보는 관점, 즉 친일파가 해방 이후에 친미파로 바뀌고 분단과 개발독재를 만들어갔다는 것이 현대사의 핵심이라는 구조적 시각은, 특히 식민지와 해방이후의 분단과 현대사를 연결하는 구조로서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 설명틀입니다. 그러나 친일파였기 때문에 친미파였고, 친미파였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 (이러한 인식을 단선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럴까라는 회의를 가진 것이죠.

과거청산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친일파에게 역사적 책임을 묻고 청산하자는 논의와, 한국전쟁과 군부독재시절의 의문사에서 지배계급이나 하수인이 인권침해를 한 것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다른 차원의 것들이 현상적으로는 같은 역사적 뿌리를 갖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이 반드시 친일파였기 때문은 아닙니다. 물론 실제 민간인 학살이나 인

권침해의 핵심적인 문제는 국가권력의 문제이며, 그 국가권력의 핵심 집단들은 일제 시대의 군인과 경찰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친일파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집단들, 예를 들어 민족주의 우파라고 불릴 수 있는 한국사회에서의 야당이라는 집단, 바로 이 사람들에게 물어야 할 정치적 책임과 당시 그야말로 국가의 폭력 수단으로서 군이나 경찰에 종사했던 집단들이 저질렀던 반인륜적인 행위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역사적 해석은 동일하게 놓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과거청산의 측면에서 과거의 책임을 묻고 해석하는 방식은 좀더 본질적인 것이 아닐까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김성수가 친일을 했기 때문에 물어야 할 정치적 책임과, 노덕술이라는 고등계 형사가 민간인들과 독립운동 인사들을 고문하고 학살했던 책임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생각할 경우 단선화의 위험성이 생기는 것 아닐까요.

**안병욱:** 제가 중간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거청산은 역사가 바뀌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한홍구 선생이 프랑스 혁명의 예를 들었는데, 과거에는 지금처럼 고급스럽게 과거청산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 같은 것이 전혀 없이 바로 단두대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답적으로 얘기한다면, 역사가 변증법적인 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세기의 복잡한 문명사회에서는 예컨대 친일파를 몽땅 잡아다가 현해탄으로 밀어버린다는지, 아니면 모든 혐의자들을 예외없이 엄정하게 처벌하게 될 때 파생되는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과거청산 논의는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감안하면서 문명사회에 맞는 합리적 방식으로 처리해가자는 것이죠. 그렇게 과거청산은 사회가 변화·발전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진실에 관한 부분인데, 사람들은 과거사에서 무엇이 진실인가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지되어 있고 알려져 있는 진실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돼서 공인 받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옳다는 것을 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관련 자료를 갖고 있는데 때가 되면 내놓겠다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그런 식은 과거청산의 실체가 못됩니다.

그리고 논란이 된 가해자의 일관성 문제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일관성 문제를 동일한 인물들의 소행이라는 식으로 단순화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됩니다. 조선시대 봉건 양반층이 친일파로 연결되었고 그 친일파가 반공세력으로 바뀌었으며, 다시 군사정권으로 연결되는 흐름을 갖는 것이지요. 이런 변천은 백년이 넘게 진행돼 온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갖는 수구 보수의 일관된 행태들은 여전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외세 의존적이고, 지배층 위주의 독점적이며 독단적이고, 폭력에 의지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해 하는 정치행태는 적어도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반층은 농민을 수탈했고, 친일파들은 민중을 배반했고, 반공논리로 개혁세력과 민중을 학살하고, 군사정권을 내세워 기득권을 위해 민중을 탄압하고 사회발전을 저지했다는 면에서, 그 구체적인 행태들은 다르지만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청산 문제는 불가피하게 친일파 문제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일관되게 친일파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친일파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 바로 이점이 우리 역사의 어려운 점이고 우리 역사의 모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 과거청산, 사회적 공론화와 입법투쟁

**안병욱 :** 이런 문제를 좀더 논의하고 싶지만, 입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중요하게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 가지요.

**서우영 :** ‘과거사청산범국민위’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만, 가장 큰 어려움은 의외로 모래성을 짓는 느낌과 같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청산이라는 커다란 사회 운동은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공감대, 사회적 인식의 합의 그리고 우리 사회를 100여 년 동안 짓눌러왔던 인식의 커다란 전환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솔직히 우리 운동의 역량이 그만큼 성장해 있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청산 운동을 위해서, 대중화를 위해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의 간담회, 민중운동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워크숍도 했는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과거청산 범국민위에 가입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사회단체 상근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 운동을 왜 혹은 꼭 해야 하는가’ 하는 논쟁이 붙었다고 합니다.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고, 앞으로 우리가 과연 입법투쟁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치더라도 혹은 입법 과정에서 타협지점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이후를 끌고 갈 수 있는 시민사회 운동의 추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을 실무자로서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만큼 가장 대중적인 이슈와 파급력을 지닌 사건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승연씨 파동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과연 우리 민족사 전체에서 과거청산운동을 담론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로 기여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현 시점에서 여론이 확산되고 그것이 공론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 만큼인지는 불투명합니다. 언론에 타고, 공개가 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 다음의 운동을 추동할 수 있는 축적물로 전환되었는가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1960년 4·19이후 불길같이 일어났던 진상규명움직임이 5·16이후에 거의 전멸을 한거 아닙니까? 겨우 지금에서야 ‘너는 가해자고 나쁜 놈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처음으로 입법을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 이상의 여건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피해자들이 유일하게 이 입법투쟁의 전선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 사회가 이 피해자들을 끌어안아서 포괄적 운동으로 가야하는데, 그 계기는 역시 입법과 제도를 통한 여론 확산으로 가는 것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현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현재 참여정부의 불안정성이 피해자들의 위기감을 부추기고 극단적인 생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많은 학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었던 것이, 그러한 현실에서 피해자들이 강하게 가는 것을 현실로 받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공고하게 굳어진 지배권력 앞에서, ‘너희가 가해자고 너희가 나쁜 놈이다. 너희가 반성하라’고 나갈 때 과연 이 정도의 저항과 반응도 없이 진전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나요? 더하면 더했죠. 이 정도의 저항이 나오리라는 것은 현실로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또 하나는 지금 최근 이와 관련한 논쟁도 있고 토론회도 만들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너무도 독특해서 한 사회가 상식적으로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의식적인 측면에서,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건이나 집단의 문제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흔히 맞닥뜨려지는 현실입니다. 이 복잡한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거청산이라는 말이 과연 어떤 양상을 띠 것 같습니까? 결국 그 양상은 한국 사회의 성격처럼 매우 독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독특한 특성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고, 이것이 복잡한 한국 사회를 어느 정도로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추론이나 가설을 가질 수 있는지 등등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의식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안병욱:** 이 얘기에 제가 좀 보탠다면, 아까 도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사회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것에 대한 사회적 호응이 쉽게 일어날 것처럼 생각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청산법을 두고 한나라당만 다른 소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활동가들 내에서도 어느정도 편차가 있습니다. 관계자들끼리는 아주 명백한 문제인데, 사회로 나가면 이 문제는 기대한 만큼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지요. 그러나 여론의 호응이 크지 않더라도 소수의 사람들로 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명이 주장하더라도 옳은 일은 분명히 옳은 것이죠. 그 옳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로 인식해서 수용할 수 있을 때 역사가 바로 서는 것이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며 기대만큼 일이 쉽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어렵게 극복하고 지금 법안을 제안하는 단계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니 법안을 제안하는 과정에 또 법안 내용에 많은 굴곡과 문제들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논의하도록 하지요.

### 과거청산, 인식의 지평 확대

**윤해동:** 여기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피해자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가 여러분을 '기가 막히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기가 막힌 얘기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단체들이 모여서 너무도 당연한 논의들만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일부러 참석한 것입니다. 과거청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피해자 단체 스스로가 척박한 환경이지만 투쟁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의식을 확대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유대인 홀로코스트문제도 1947,8년경부터 미국의 대유럽정책이 변화하면서 그냥 묻어두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50년대 초반부터 유대인들이 반발하기 시작했고, 이와 아울러 미국의 정치권에서 유대인들의 발언권이 강력해지면서 유대인의 피해자 운동이 미국의 대 서독 정책을 바꾸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50년대 후반부터 독일 스스로가 과거청산에 나서는 데는 이런 상황이 작용을 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피해자 운동은 아주 중요한 국제법적 원칙을 만들어냈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인도에 반하는 인권유린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의 시한을 정하지 않는다는 국제법적 원칙을 확정하는 성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출발은 아주 미미한 것이었죠.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프랑스의 과거청산 문제도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드골이 정권을 잡으면서 1950년대 초반부터 과거 문제를 묻어두려고 했지만, 68혁명 이후에 프랑스의 대독협력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온 것이죠. 복잡한 성격을 가진 비시 정권에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과거청산 문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피해자 운동이 사회적 동의를 끌어내기 어려운 참담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되,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따져봐야 합니다. 적절한 사례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문제에 있어서 북한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던 지역에서는 지역 내 갈등에 의해서 학살이 발생한 사례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과거의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문사나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그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박정희 정권 시기에 일반국민들이 박정희를 지지하는 표를 던짐으로써 그 정권에 가담했던 공모구조가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회적 현실을 냉철하게 인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옳고 그름의 선악의 관점에서 출발해서 사회정의를 세울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착오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공모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분위기를 바꾸고, 그것이 심각한 인권유린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사회적 공감대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국가를 통한 사회적 정의의 회복이라는 과제를 내세우는 것보다는, 인권유린이나 학살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좀더 상위의 보편적 이념을 세움으로써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이 문제해결의 중요한 방식 중의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 중의 민간인 학살문제는 사회적 정의의 문제이기보다는 평화의 문제입니다. 전쟁 자체를 문제 삼음으로써 평화라는 이념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의문사라는 것은 분명 인권유린 행위로부터 출발한 것이지요. 사회적으로 기소연한을 없애고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사회적 정의보다는 평화와 인간의 기본권과 같은 이념을 내세움으로써 보다 고양된 사회적 환경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홍구:** 과거청산문제보다 평화운동과 같은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윤해동 선생이 말씀하셨는데, 저처럼 미력하나마 평화운동에 발을 담그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과거청산을 둘러싼 입법문제와 평화운동이 마치 대립 관계에 있는 것처럼 설명하시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한국에서 평화운동이 안 되고 있는가, 왜 평화문제가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과거청산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간인학살로 백만명이나 죽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50년 세월이 흐른 뒤에야 입법청원을 해야 하는 상황과 연결되어 있죠. 방금 전에 기소 연한 폐지, 사회적 정의와 인간의 기본권과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유가족들이 '우리는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진실이라도 규명을 해달라'고 가해자 쪽에다가 호소하고 탄원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다 높은 평화와 인권의 문제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으로서라도 입법화를 통해 과거 사건들의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과거청산을 위해서 입법문제, 정치적이면서 도덕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청산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청산문제에서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람들을 용서할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일 문제가 단순히 일제시대에 발생한 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대한민국 수립 이후 친일파가 국가기구를 장악하고 국가기구를 동원하여 민간인을 학살하고, 그 이후 온갖 인권침해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해자로서의 국가는 그 부분을 객관화 하고 국가가 스스로 공개하고 반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바로 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청산의 입법화 문제가 따로 존재하고, 평화의 문제가 따로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평화운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만, 결코 그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홍세화:** 저도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진실이 규명된 바탕 위에서 우리가 교훈도 얻고, 교육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저는 폴레랑스, 즉 나와 다른 것에 대한 용인이라는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평화라든지 인권이라든지 하는 가치와 결국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민간인 학살문제에 담겨 있는 인간의 속성, 다름을 빌미로 정치적 동기나 이런 것에 의하여 추동될 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으며 집단적 광기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성적인 성찰이 바탕이 될 때, 폴레랑스와 같은 사상이 자리 잡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한국전쟁 전후로 발생했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실, 이것이 바탕이 될 때에만 이 바탕 위에서 우리는 타자와의 관계라든지 나와 다른 사상이나 테제를 어떻게 용인해 나갈 수 있는가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상규명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 상대방 탓만 하고 있고 기껏해야 냉전이나 전쟁 상황 탓만 하고 있을 뿐이지요. 다시 말해, 인간이 이성이 결핍된 상황에서 추동될 때 얼마나 잔인하고 집단적 광기를 드러내는가라는 문제의식이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은 진실규명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일차적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주 낮은 단계의 논의 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폴레랑스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덧붙여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김민철:** 저는 과거청산 문제를 크게 세 가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억의 문제, 즉 과연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현재에 불러내는 피해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숨겨져 있거나, 억압되었던 것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누가 그것을 불러낼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책임의 문제입니다. 아마 여기에는 법을 통한 방법과 법을 넘어선 더 근본적인 높은 이념을 통한, 즉 인권이라든지 평화와 같은 이념을 통한 방법이 있겠지요. 그러면 과거에 일어났던 피해나 사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갖는가? 국가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그렇다면 방식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겠지만, 이 문제를 제기할 때 그것을 넘어선 문제들에 대해서는 윤해동 선생이 제기하셨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민간인 학살이나 빨갱이 사냥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당시 사회가 묵인했다든지 용인한 측면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책임의 문제는 당시의 사람들 또는 현재의 사람들이 져야 할 책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 책임이라는 것이 누가 어떻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치열하게 얘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동일시 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가 져야 할 책임과 개인이 져야 할 책임, 또는 사회가 져야 할 책임이 다르고 그 내용과 크기도 다른데, 현재는 좀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 다양한 책임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그러므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



에 모두가 무죄'라는 극단적인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치유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과 함께, 더 나아가서 가해에 가담했던, 그리고 묵인했던 사람들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해동 선생이 제기한 문제는 대단히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전제하기 위한 과정이 압축적으로 생략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 과거청산, 민주화운동의 새로운 의제

**안병욱:** 2002년 봄 친일파명단이 공개되고 친일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때로부터 겨우 2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김대중 정권에 이어 노무현정권이 들어서면서, 뭔가 우리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이루어질 것처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반독재운동과 반군사정권운동에서 이제는 이러한 과거청산의 문제를 고리로 삼아 좀더 근원적인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민주화운동의 한 방편으로 과거청산운동을 새롭게 제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기독교계는 곧바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1960년대 어려운 시기에 임종국 선생님과 같은 분들이 친일파 문제와 친일문학론을 얘기했을 때, 그 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운동의 이슈로서 전환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후 문민정부로부터 참여정부에 이르면서 우리 사회의 보다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는 과거로부터의 뿌리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어디에 잘못이 있는가 하는 것을 공론화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사회의 역사의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청산은 그 자체로 피해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맥락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방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민주화운동 세력들과 연결이 되면서, 지금의 입법화 문제에까지 연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홍구 선생님이 적절히 표현하였다고 보는데, 지금 한계에 부딪혀 있는 우리의 사회운동을 돌파하기 위한 적절한 의제설정을 과거청산 문제가 만들어내고 있으며, 과거청산은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문제제기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21세기가 되면서 과거청산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사회를 전망하는 중

요한 단서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21세기적 패러다임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들을 생각해야 하는가? 과거의 잘못들에 대한 점검을 통해 미래의 새로운 전망을 세우자는 측면에서 과거청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 정점에 이르러 있고 곧 입법화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여당이 의회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는 내년 보궐선거 이전에 끝내야 한다는 시간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유를 부릴 수 없는 조건 중에 하나죠. 제한된 시간 내에 일정한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다시 과거의 원점으로 후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과거청산 자체의 측면을 고려하는 동시에, 운동진영이나 개혁세력 입장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이어진 운동의 연장선에서 살펴 볼 때 이 시점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야 하는 전술적인 측면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입법화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이 과거청산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발전전략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윤해동:** 사회자께서 “과거청산은 현 상황을 돌파하는 새로운 의제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또 문제가 환원되어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너무 얽매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념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새로운 21세기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과거청산이 새로운 의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제로서의 역할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더 갖추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우영:** 범국민위의 활동에서의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과거청산 범국민위의 운동이 대중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약하고,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다 어두운 측면이 많고, 대부분 피해자들의 증언과 고발·폭로를 위주로 이루어져 온 것이 과거청산 운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바꿔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과거청산으로부터 국민들이 미래의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라는 문제제기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그런 것이 있다면 정말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과거청산운동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고발과 폭로, 가려



진 진실에 대한 들춰내기 형식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흔히 말하는 후유증이 생겨난다고 해야 할까요? 좀더 발전적인 방향들이 없겠습니까?

**한홍구:** 아마 서우영 국장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과거청산 운동의 실제 고민이겠죠. 아마 늘 친일문제라든가 과거청산 문제를 이야기할 때, 분명 친일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마땅하게 청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과거청산에서 제일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는 분야가 친일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해방된지가 6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친일파 타령이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과연 우리의 과거청산 운동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해답을 제시해 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청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일 문제를 바라볼 때 '왜 우리가 친일문제를 바라봐야 하느냐'는 시각으로, 그리고 이것이 일제시대의 행적을 갖고만 생각을 하면 대단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해방된 마당에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해방되었으니까 친일파 다 봐줘도 된다'고 얘기해요, 어지간한 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봐줘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친일파들이 해방된 공간에서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하는 점입니다. 해방 이후 60년이 다 된 친일파 문제를 우리가 지금 따져봐야 하는가는 바로 이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일제시대의 친일행위를 청산하고자 한다면, 정말로 한나라당 법안대로 역사학자들에게 맡겨서 조금 천천히 가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친일파들이 일제시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방이후에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을 하면서, 민간인 학살과 군사독재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가령 군사독재 시절에 본다면 전두환 개인이야 친일파가 아닙니다, 이근안 역시 친일파가 아닙니다. 그러나 노덕술과 박처원에서 이근안으로 민간인 학살과 고문이 그대로 이어졌고, 그런 고문기술자를 불러내고 고문을 자행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한나라당 의원으로 남아 있다는 지금의 이 현실에서, 그리고 의문사나 민간인 학살이나 친일파 문제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거청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과거청산 운동이 이런 문제(과거에 매몰되는 것)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일문제 다루는 사람은 친일문제만, KAL 사건은 KAL 사건만, 의문사는 의문사만 민간인 학살은 민간인 학살만 다루는 식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나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서로 연결시키고 어떻게 서로 힘을 실어줄 것인가, 그리고 다양한 과거청산 운동이 있는데 이 속에서 국면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판단함으로써 어떤 부분들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 집중을 위해서는 과거청산 문제를 바라보는 포괄적인 안목이 필요한 것이지요.

**서우영:** 시민사회단체들 내의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과거청산 범국민위를 꾸려나가는 중심적인 힘을 구성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역시 이 문제는 과거청산 운동이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사회적 위치와,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역량들의 현재성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친일문제가 일제시대 안에서의 문제로만 머물러 있고, 해방이후의 정국으로까지 연결되어 논의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는 교수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해방이후에는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맞물려 있었고 특히나 반공이데올로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한국 사회운동의 궁극적인 목표였는데, 거기서 가장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친일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고 무엇인가를 제시할 수 있는 과거청산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델들을 생각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는 대중들에게는 어떠한 투쟁방법이나 선전 또는 구호 등 아직 뚜렷한 상이 잡혀있지 않은 부분들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안병욱:**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엄청난 공력이 듭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의 과거청산 논의에 이르기까지 60여년의 시간을 필요로 했지요. 그러나 막상 그 구체적인 방법과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는 이제 겨우 몇 달밖에 안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남아있는 단계인 법이 만들어져서 과거청산의 작업에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작업은, 아까 한홍구 선생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사회에 그런 업무를 담당해낼 수 있는 총체적인 역량이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준비가 부족하거나 안 되어 있어요. 기껏해야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제주 4·3 사건위원회의 활동정도가 경험으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과거청산을 해야 하고 또 막상 법안을 만들려고 하니깐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것이죠. 윤해동선생



의 말씀은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사의 족쇄로부터 벗어나는 일, 그러니까 현재 가해자든 피해자든 또 민중운동 민주화운동 관계자들도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고 벗어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피해자들도 과거의 피해가 야기한 질곡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겠지요. 이 뒷덜미를 잡고 있는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지, 지금 요구되는 것이 보복이나 응징을 통한 과거청산 같은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논의의 결말이 가령 앞으로 몇 십 년이 지나서도 의미가 있으려면, 개인적이거나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에서 도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한 논의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법화 과제에서 여러 논란들을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과거청산운동, 향후 과제와 전망

**홍세화:** 왜 과거청산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일까요? 지금 사회현상적으로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 번은 거쳐야 될 것이 지체되었다고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가 60여 년 동안 왜 그와 같은 질곡 속에 있어왔을까? 사회 구성원 사이의 관계가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면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 하는 관계, 말하자면 서로가 서로를 극복해야 하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부정해야만 했던 관계를 만든 조건은 일제부역세력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제부역세력은 반대세력을 죽이지 못하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즉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를 관철시키게 한 뿌리였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그들을 적이라고 규정하기 전에 그들을 적시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이미 적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꼭 정리되었어야 하는 것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런 상황으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결국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집단과의 관계가 서로 상대방을 용인하면서 경쟁하는 관계로 서기 위해서도, 지금까지 서로가 서로를 극복해야 했던 관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도 그야말로 지금 이 상황이 그것을 위한 진통이라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저는 지금 정서적인 측면에서 구성원을 지배하고 있는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청산이 잘 이루어지려면, 그동안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그럼으로써 그야말로 뻔뻔할 수 있었던 한국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부끄러움

의 부재'에서 부끄러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 즉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지상주의가 여전히 관철되고 있으며 이 부분과 충돌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국가적 구호가 되어버린 사회에서, 다시 말해 사회구성원들이 경제동물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끄러움의 회복은 곧 인간성의 회복인데, 부끄러움의 부재와 강력히 결합한 경제지상주의를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것인가가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철:** 홍세화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사실 작년부터 고민했었습니다. 도대체 이 과거문제를 가지고 현실에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홍선생님께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가령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문제겠지요. 반성할 줄 모르는, 저는 '반성할 줄 모르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책임의 문제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사회는 굉장히 무책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문화적 근원으로 저는 반민특위의 좌절이 어떤 심리적, 역사적 영향으로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생각하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책임이란 문제를 한국사회에 던져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문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어떤 하나의 권력체계에서 상관이 고문을 지시했다고 상정해 봅시다. 그럴 때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이 실제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것이 이야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과거사 문제가 정치문화, 나아가서 문화 전반의 문제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두 개의 가치가 부딪쳐서 그 문제를 서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라면 그것은 충분히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현재의 구조는 그렇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국사회가 겪었던 하나의 문화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그걸 같이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장치나 과정들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몇몇 시도들이 있습니다. 노산문학관이나 조두남음악관 건립을 둘러싸고 마산의 지자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기념관 추진위가 합의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지자체장의 합의 번복으로 지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이런 것이 현재 과거문제를 놓고 우리 현실에서 부딪치는 가치 충돌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작지만 소중한 경험들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병욱:** 지금 친일진상규명법을 비롯한 과거사법안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과거청산의 본질적 측면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서우영:** 지금 '친일법'이 초두의 관심입니다만, '친일법'에서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앞으로 다른 모든 위원회의 법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원회 구성문제를 보면, 친일법은 삼부추천으로 여야가 모두 합의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삼부추천은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명분이 없죠. 친일법에서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위원회 구성을 삼부추천으로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특이하게 친일 반민족 행위자 선정부분을 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전체적으로는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규정 자체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친일과 문제를 마녀사냥식으로 확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엄격한 규정이 결여됨으로 친일과 문제를 더 희화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친일법 쪽에서는 그 비중이 약하지만 동행명령권이나 자료제출권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여야간의 합의안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들의 정보로는 핵심적인 위원회 구성 문제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선정을 빼는 문제, 그리고 법 자체를 친일이 아니라 부일법으로 바꾸려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포괄적 과거청산법'의 몇 가지 문제 가운데 군 의문사문제가 있는데, 열린우리당이 군 의문사법을 포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구 구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상임 5명, 비상임 8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이 포괄적 과거사법이 다뤄야 할 주제나 내용으로 볼 때 13인의 상임위원으로 위원회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사권한에 있어서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동행명령권과 자료제출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과태료 처벌로 사실상 무효화시키려 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양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공소시효문제입니다. 과거사법도 역시 친일법이 어떤 형태로 정리가 되고 나면 다시 논쟁이 붙을 것 같습니다.

**김민철:** 친일법에서 또 하나는 현재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문제로 위원회에서 일년에 정례적으로 대통령에게 한번, 국회에 한번, 이렇게 두 번 정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일반 민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사실상 차단시키는 그런 위험한 조항을 살리려고 하고 있죠.

**안병욱:** 기대와 달리 현재 여당이 이 문제에 있어서 야당눈치를 보는 것을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이고, 법 내용도 형해화되어서 실질적인 조사권한은 없고, 또 조사할 범위도 축소되고, 무엇보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소모적인 논쟁에 빠져 실질적인 문제들이 간과되고 말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문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으로는, 의문사위원들은 비교적 짜임새가 있었고 역량을 갖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논의에 들어가게 되면 위원들 간의 의견 편차는 상당히 크게 났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문제이고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원들 사이에 여러 분란이 생기는데, 현재의 과거사 문제는 60년 이상 된 논쟁점, 더군다나 현재 사회적으로도 가치관에 따라서 엄청난 편차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를 다양하고 진폭이 넓은 성향의 인물들로 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에는, 뻔히 예견되는 것이 위원회 자체가 내부적으로 혼란에 휩싸여 표류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구조적으로 기대했던 성과를 얻어내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청산을 왜하느냐, 목적이 무엇이나 하는 얘기는 그 대목에 가게 되면 전혀 먼 나라 얘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문자 그대로 통과의례적인 과거사법이 입법화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 같아요. 말씀을 좀 해주시죠.

**한홍구:** 결국은 국민의 힘으로 돌파해야 하는 수밖에 없죠. 여기에 특별한 묘수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입법문제를 풀어나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의 위치가 옛날과는 크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전두환 시절에 싸울 때는 정말 소수자의 입장에서 방어하면서, 감옥 갈까봐 고민하면서 외치는 그런 식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공세를 취하고 입법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비록 누더기가 되었을지언정, 어쨌거나 법안으로 통과시키고 범국민위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윤해동 선생님의 말씀을 좀 많이 반박을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만, 윤해동 선생님의 말씀에 소중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소수자의 차원에서 구걸을 해야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힘을 갖고, 법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다 하더라도 법으로서의 강제력을 갖고 시행되게 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많은 내용들을 지적해 주신 거고, 그것들 중에서 우리가 경청을 해야 할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바뀐 입장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 그리고 우리가 가야할 길을 생각하면 아직도 태산이고 아직도 높기만 하지만



뒤를 돌아다보면 엄청나게 온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자족하자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대중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병욱:** 마지막으로 토론을 마무리 하면서 한 마디씩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 마무리라기보다는 각오라고 할까요? 제가 항상 문제를 좀더 대상화시키고 근원적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과거청산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실제 조사활동에 들어갈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기구로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이야기와 사회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회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나간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넘어서는 문제들이 과거청산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베트남문제라든지, 민간인학살에서도 국가권력에 의한 학살이 아닌 이념 차이에 의한 학살 같은 문제는 위원회가 풀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영역은 사회가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풀어낼 수 있는 공감대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것은 그 피의 이야기를, 피해자의 고통을 얼마만큼 사회화시키는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가하는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과거청산의 문제가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지만, 실제 우리들이 이 문제를 풀어나갈 역량들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서 활동가와 연구자와 이 문제와 관계됐던 사람들을 네트워크로 구축하면서 한꺼번에 터져나온 과거청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집단적인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역사교사모임 같은 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한다면, 실제 역사교사들이 이 문제를 사회화시키고 교육화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사회화시키고 교육시키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고민해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입법화가 최선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반드시 우리의 처지가 그렇지만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먼 길 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윤해동:** 국가폭력 또는 준국가폭력의 문제를 국가입법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제시기 협력자를 국가가 조사하는 법안 곧 친일조사법안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게 될 때 지게 될 부작용 또는 위험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지배층의 연속성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역사해석의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민족주의적 또는 국민주의적 기준을 내세워 국가가 조사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민족반역자, 곧 민족에 대해 반역행위를 한 자에 대해 조사를 한다는 것은, 다양한 측면들이 개입해 있는 그 행위에 대해 국가적 해석을 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발적으로 또는 직업적으로 협력한 자들에 대해서는 거론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기능적인 협력자에 대해서 국가가 해석에 개입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홍구:** 윤선생님 지적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이 국가 건설시기라면 친일문제, 일제시대 행적문제를 소상하게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건국 이후 60년이 지난 마당에서 친일문제를 국가가 다시 다룰 때에는 상당한 조심성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친일문제에 대해서 일제시대의 행적보다도 해방이후의 친일파들이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는가 하는 쪽에 맞춰야만 그것이 포괄적 과거청산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김민철 선생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과거청산은 우선 국가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지금 입법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국가에 책임을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가 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사회가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아까 잘 지적하셨듯이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죠. 그 피해자들이 당했었던 사건, 민간인 학살의 고통 등을 접하게 되면 기가 막히죠. 국군한테 살해당했는데도 자녀들한테도 이것을 숨기고 인민군한테 학살당했다, 빨갱이한테 학살당했다고 그렇게 말하며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고통을 사회화하고 사회가 이것을 인정하고 같이 안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을 낱알이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과거청산이라는 것은 미래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청산은 과



거를 낱알이 밝히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가 그 문제를 떠안으면서 그것을 잘 덮고 다음단계로 나아가는 것, 즉 누구를 처벌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누구를 어떻게 더 잘 봐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밝히는가보다는 크게 볼 때는 과거를 어떻게 덮어낼 것이냐에 있다고 봅니다. 과거를 덮기 위한 전제로서는 일정하게 밝혀내고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책임추궁은 다양한 형태가 있겠습니다. 처벌의 형태가 있을 수 있고, 가해자가 인정을 하고 사죄를 하고 반성을 하고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확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적어도 밝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힘을 가진 자에 의해서 덮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하에서 덮자는 것입니다.

**서우영:** 홍세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끄러움의 문제, 반성의 문제, 즉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당연한 풍토로 여겨져야 하고, 그런 성숙된 도덕적 합의나 사회적 분위기가 진정한 과거청산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과연 한국사회가 그런 정도의 성숙을 보여주는가에 대해서 저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래성 위에서 과거청산 운동을 하는 듯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실무자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과거청산을 얘기하는데 일제시대 때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들의 저항력도 100년을 꾸려왔습니다. 중간 중간에 파열은 있었지만 공고화된 권력이 되어 저항을 하고 의식을 장악하고, 반공이데올로기로 뭉쳐 있는 상황에서 성숙한 민주사회, 도덕적 사회로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과제가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한 막연함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가해자와 피해자들,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함께하고 있는 아주 복잡한 사회에서, 문화적으로는 이데올로기적인 지배력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원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과연 사회적 합의 속에서 이런 문화적 현상들을 극복 혹은 소화하고 과거청산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현재 한국사회의 문화가 갖는 다양한 현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과거청산의 내용들은 무엇이고 어떤 특징적인 단계들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를 좀 더 냉철하게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보다 많은 학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도 좀더 집중이 되어야 하고, 그런 연구성과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과거청산의 모델, 경로, 로드맵 등이 얘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세화:** 저는 이 문제가 우리로서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배는 무척 고픈데 이것을 해소하는 길은 천천히 먹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시점을 놓치면 언제 하겠느냐는 식의 생각보다는 이제 그야말로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끈기가, 지체되는 것에 대한 끈기가 필요하고 절망에 빠지지 말자는 것이며, 여기에는 우리의 성실성과 결집력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상대적으로 과거청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갖고 있는, 다시 말해 기득권을 계속 누리하고자 하려는 것에서 비롯되는 성실성과 비교해서 우리의 성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치열한데 우리가 치열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성해야 합니다.

**안병욱:**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일제식민지로부터 지난 60년의 과정을 보면 우리 역사가 끊임없는 파탄 속에서 진행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해 왔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과거청산의 문제를 60년 동안 거론하고 있다는 것도 역으로 생각하면, 과거청산 문제를 우리가 한번도 역사에서 놓친 적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 역사의 매력은 바로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자랑삼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우리사회의 나아갈 방향, 지켜야 할 가치, 사회 정의, 올바른 역사를 누군가는 끝까지 챙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의 저력입니다.

그동안 과거청산을 위한 싸움에서 얻어낸 것들은, 짚어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얻은 성과에 대해서는 이미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주목을 하지 않고, 아직 우리가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목적을 두고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현상적으로는 할 일이 태산 같아 막막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투철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이는 기대한 만큼 만족을 얻지 못한, 그래서 항상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숨에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과도한 욕심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역사의 바른 방향을 위해서 즐기치게 투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금 현재의 노력이 후세에 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잘못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죠. 네 시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명쾌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토론과정에서 참여하신 서른 명 정도 여러분들은



각자 마음속에서 토론 내내 많은 고심을 통해 이미 상당한 식견을 쌓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 전명혁>

## ■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경과보고

○ 2004년 8월 3일

연구자단체와 과거사 관련 단체들이 “과거사청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가칭)” 준비모임 회의.

○ 8월 18일

“포괄적 과거청산 구상”에 대한 입장마련을 위한 관련 민간단체 및 피해자 단체 긴급 간담회 개최.

<참여단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시민연대,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KAL858기사건진상규명시민대책위

○ 8월 20일

“포괄적 과거청산”을 위한 피해자 단체와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주요내용> △ 노무현 대통령의 포괄적 과거청산 의지 표명 환영 △ 과거청산 방향을 진상규명, 명예회복, 사회통합으로 제시 △ 과거청산의 정략적 이용 반대 △ 국정원 등 정부기관 스스로 과거 의혹 사건 조사 촉구 △ 일부 언론의 과거청산 본질과 취지 호도 비판 △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 권한을 가진 통합적인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 합의 천명 △ 과거청산 위원회의 국회 소속 반대 △ 과거사청산을위한민간공동위원회(가칭)(민간위원회) 구성 제안.



## ○ 8월 27일

과거사청산을위한민간공동위원회(가칭) 결성을 위한 참여단체 실무회의 개최.

## ○ 9월 3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준비모임)’ 발족과 학술심포지엄 개최

<주요내용> 대표자회의를 통해 1000여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준비모임)’ 발족. 「학술심포지엄 : 과거청산의 과제와 방향」 개최.

## ○ 9월 25일

추석 대국민 캠페인 실시

<주요내용>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 촉구를 위해 서울역, 청량리역 등 주요 역사에서 선전물 ‘화해 전에 진실찾기’를 귀향객들에게 나누어 주며 대국민 캠페인 실시.

## ○ 9월 23일

열린우리당의 과거청산법안 개요에 대한 항의성명 발표

<주요내용> 국가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조항 삭제 등 철저한 진상규명 조치가 없는 열린우리당의 과거청산법안 개요에 대해 단호한 반대입장을 밝힘.

## ○ 10월 8일

「과거청산! 진실과 화해 나무 키우기」 릴레이 금요캠페인 시작.

<주요내용> 매주 금요일, 국회 앞 또는 종로 등지에서 과거청산 관련 주요단체들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과거청산의 과제와 올바른 의미를 알리는 릴레이 금요 캠페인을 전개.

## ○ 10월 13일

열린우리당 과거청산법안(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에 대한 논평 발표.

<주요내용> △ 군의문사와 일제강제동원 사건 포함 △동행명령 불응시 벌금 부과 △공소시효 정지 △진상규명을 위해 최소 10명 이상의 상임위원 보장 △과거청산과 근현대사 정리 문제 분리 요구 등.

## ○ 10월 14일

▷ 민중진영 대표자 간담회 실시

<주요내용> 올바른 과거청산 관련 입법 추진과 과거청산의 국민적 대중화를 위해 민중진영이 적극 노력키로 결의.

▷ 조선일보 <좌파는 발굴하고 우파는 매장하고> 사설 관련 논평 발표

## ○ 10월 15일

▷ 「한나라당! 민간인학살 문제 완전 해결 촉구 전국 유족대회」 주최

<주요내용> 민간인 피학살 전국유족들이 한나라당사 앞에서 과거청산에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규탄 및 입법촉구 대회를 가짐.

▷ 열린우리당 과거청산법안 군의문사 제외에 항의하며 군가협, 군사연, 의문사유가족대책위 국회 앞 집단 농성 돌입.

## ○ 10월 17일

열린우리당 정책의총 과거청산법안 당론 확정에 즈음하여, 과거청산법안에 대한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

<주요내용> △권위주의 정권까지의 종기 규정 △상임위원 수 △공소시효 정지 삭제 △실효성 없는 권한 부여 △진상규명 기구 체계화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규정 △부칙 제5조(다른 법령에서 진실규명 신청 가능한 경우 통합법에 의한 기구에 신청 금지)의 부당성 지적 및 보완 요구



## ○ 10월 18일

열린우리당의 과거청산법안에 군의문사 포함 요구하는 군의문사 유가족 농성자들을 강제 퇴거에 대한 항의와 군의문사 포함 재차 촉구하는 성명 발표.

## ○ 10월 20일

▷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확정된 과거청산법안(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안)에 대해 과거청산 원칙으로 △포괄적 과거청산 △철저한 진상규명 △원칙 있는 화해를 발표하고,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을 위해 대국민적, 전방위적 운동 확대를 선포.

▷ 과거청산 운동 대중화를 위한 활동가 워크숍 실시.

## ○ 10월 21일

▷ 민주노동당 과거청산법안 제출에 대한 환영 논평 발표.

▷ 「과거청산을 위한 목요일레이 학술토론회」 1차 토론회 실시.

<주요내용> 총 6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과거청산의 방향 설정을 위한 학술토론회를 계속.

## ○ 10월 26일

「민주주의의 걸림돌 조선일보 규탄대회」

<주요내용>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주요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반민족 반민주언론 조선일보 규탄대회 가짐.

## ○ 10월 28일

▷ '올바른 과거청산법 즉각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 돌입

<주요내용> 매주 월~금, 오후 12시~13시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1인시위 진행

## ○ 10월 29일

'4대 개혁과제 완수를 위한 연대 조직 공동기자회견' 실시.

<주요내용> 과거청산국민위, 국보폐지국민연대, 언론개혁국민행동, 민주적사립학교법국민운동본부 등 4대 개혁입법 관련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가짐. 기자회견을 통해 입법화 완수를 위해 11월 중순까지 공동투쟁 연석회의 운영과 국민참여형 농성 등 주요 투쟁기조 발표.

## ○ 11월 2일

국회 앞 기자회견과 농성투쟁 돌입

<주요내용> 국회 앞에서 '올바른 과거청산법 완전 쟁취를 위한 농성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곧바로 국회 앞 노숙농성 투쟁에 돌입 함.

## ○ 11월 4일

▷ 「과거청산을 위한 목요일레이 학술토론회」 2차 토론회 실시.

## ○ 11월 5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전국 피해자 추모행사와 합동위령제. (여의도 공원)

## ○ 11월 9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발족 대표자회의와 발족식.

## ○ 11월 11일

▷ 「과거청산을 위한 목요일레이 학술토론회」 3차 토론회 실시.

## ○ 11월 18일

▷ 「과거청산을 위한 목요일레이 학술토론회」 4차 토론회 실시.



○ 11월 19일

「과거청산! 진실과 화해 나무 키우기」 릴레이 금요캠페인

○ 11월 25일

▷ 「과거청산을 위한 목요일레이 학술토론회」 5차 토론회 실시.

○ 11월 27일

▷ 「과거청산을 위한 목요일레이 학술토론회」 6차 종합토론 실시.

○ 11월 29일

KAL 858기 진상규명 촉구 17주기 추모행사. (서울시청 앞)

○ 12월 7일

▷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국회 영화상영」 제 1기 의문사위 활동을 다룬 다큐멘터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상영.

○ 12월 21일

‘올바른 과거청산법 완전 쟁취를 위한 국회 앞 농성투쟁’ 50일 쟁.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연속 토론회 자료집

비매품

발행처 /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http://ktruth.org>

E-mail : [cortruth@hanmail.net](mailto:cortruth@hanmail.net)

Tel : 02-778-3438

Fax : 02-778-3437

발행일 / 2004. 12

인쇄처 / 내일기획(02-2279-2711)